



제 21권 제8호(통권 165호)

2020년 8월 2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vol. **165** 2020.08.
Hanwoo Journal

contents

현장스케치

- 44 전북도지회 “주체적인 한우산업 안정화 노력” 결의
- 45 지붕까지 차오른 빗물...“한 생명이라도 더”

특집 | 한우산업 발전방안

- 48 국무조정실에 한우산업 규제개혁 건의
- 68 21대 국회에 바란다
- 80 수급조절 위한 생산자단체 노력까지 ‘무위로’

시선집중 |

- 84 자조금 개혁방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 92 전북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도입 물결
- 98 [중앙회 MOU 탐방] 단바이오텍

사양·컨설팅 |

- 108 환경관리 개선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114 한우사육 100문 100답 _ 축산과학원
- 118 축산환경의날 자가점검표
- 122 중국·대만 렘피스킨병 발생 _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식·정보 |

- 127 협회소식
- 136 주요 뉴스 갈무리
- 141 한우를 알려드림 _ 비육우 경영안정제란?



전북도지회 “주체적인 한우산업 안정화 노력” 결의

전북도지회 회원들은 지난 7월 22일 전북도지회 심포지엄에 앞서 △주체의를 통한 문제해결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급안정 △깨끗한 한우농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결의하는 한편 송아지 안정제 현실화와 비육우 안정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북도지회 이 휘 청년분과위원장(좌)과 문현주 여성분과위원장(우)은 전북 한우농가를 대표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홍길 회장에게 전달했다.



지붕까지 차오른 빗물…“한 생명이라도 더”

행정안전부는 13일 전남 나주시, 곡성·구례·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전남 순천·광양 등 섬진강 하류지역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순천시 황정면 한 한우농가에 물이 차올라 소방관 및 경찰, 순천광양축협이 민첩하게 구출하고 있는 모습.

A close-up photograph of a brown cow's back and tail, serving as the background for the text.

특집

한우산업 발전방안

1. 국무조정실에 한우산업 규제개혁 건의
2. 21대 국회에 바란다, '한우산업 안정화 제도' 마련
3. 생산자는 '정책 파트너'...정부 노력 및 태도 변화 촉구



002
0949
8800 5

국무조정실에 한우산업 규제개혁 건의

퇴비부숙도·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한우산업 관련 규제개혁 주문

우리 협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현장 규제어로 사항에 관해 개선 및 규제완화 검토를 요청했다.

국무총리 소속 개선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에 전달하여 타당성 검토 및 추가협의 등을 조정한다.

우리 협회는 최근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 의견 및 규제개혁 건의를 통해 축산업 일부 개정안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전북도지회 정읍시지부의 숙원이었던 가축시장의 합법화를 함께 이끌어 냈다.

퇴비부숙도 유예기간 연장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과 이밖에 ▲지역축산업 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제명) 개정 ▲퇴비사 신축시 건폐율 부족문제 해소 ▲가축분 유기질비료 가축분뇨만 사용 ▲폐사축 처리방안 마련 ▲원산지 표시제 하위법령 개정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수의사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건의과제 목록

| 연번 | 건의제목 | 관련법령 | 소관부처 |
|----|-----------------------------------|---------------------------|------------------------|
| 1 |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2조(제명) 개정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 | | 농협협동조합법 제30조제1항 | |
| 2 | 퇴비 자원화를 위한 퇴비사 증개축신축시 건폐율 부족문제 해소 | 건축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3 | 가축분유기질비료에 가축분뇨만 사용 요구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
| | |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 4 | 폐사축 처리방안 마련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환경부 (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
| 5 | 원산지 표시법 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 |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 | | 축산물위생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 6 |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7 | 수의사법 개정 | 수의사법 |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

(기관명 : (사)전국한우협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제명) 개정

■ 소관부처(규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제명)
-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제명)제1항

■ 현황

-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제명) 제1항에 조합원 제명요건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명규정

제12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 나.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다. ○○○○ 경우
(비고) 다목은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에 적용
3.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 문제점

- △△축협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협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여러 형태의 경제사업 중에서 하나로 마트와 예금, 대출 등 금융, 카드 발급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축협에서 판매하는 배합사료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에서 제명한 사례 발생(소송 진행중)
- △△축협 사례(판례)를 활용하여 전국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전국한우협회, 지역축협, 단위농협 조합원을 전국의 농축협에서 일부 또는 하나의 경제사업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우려가 높음.
- 축협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전체 농가(2,314천명)가 해당될 수 있고, 농가의 선택권과 자율성 해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농업 질서를 흔들고 농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심도있는 검토와 농협과 면밀한 정책 협의 시급

■ 개선의견

-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제명)제1항 또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제명)에 제명 결의시 갖춰야 할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법령 개정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제명)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다만, 경제 사업중 사료구매, 농자재, 생활물자 구매 등 어느 한가지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신설) 사료구매, 생활물자 구매 등 경제 사업중 어느 한가지 이상 이용 하는 경우 |

■ 기대효과

- 농축협 조합원(농업인)에 대한 조합장의 일방적이자 악의적인 제명이 불가하여 조합원(농업인)이 제명에 따른 불안 없이 안심하고 농업이나 양축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02

퇴비 자원화를 위한 퇴비사 증개축 신축시 건폐율 부족문제 해소

■ 소관부처(규제기관)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건축법 시행령

■ 현황 : 퇴비부속도검사 의무화로 퇴비사확보 또는 부속하여 외부반출 해야함

■ 문제점

-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못하는 비수기에 우사·농장내 퇴비사에 퇴비 저장으로 퇴비화에 필요한 공간 부족
- 축산농가는 신규로 퇴비사를 증축하고자 하나, 건축법상 건폐율 부족 문제로 인해 공간 확보에 어려움
- 가설건축물 관련 건축법 시행령과 충돌되는 시군 조례가 존재

■ 개선의견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 11) 개정
 - 퇴비장에 대한 건폐율이 한시적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단, 퇴비부숙도 제도시행에 따라 (20.3.25) 퇴비 부숙을 위해 퇴비사 확충을 위한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 |

- 건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가설건축물 관련 조례 일원화 및 일괄 개정

■ 기대효과

- 퇴비부숙 활성화를 통한 환경 오염 방지, 자원 활용 증대
- 축산농가 건폐율 부족 문제 해소로 가축분뇨법의 성실한 이행

03

가축분유기질비료에 가축분뇨만 사용 요구

■ 소관부처(규제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지침
-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별표5]

■ 현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의 재활용과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것인데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을 비료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함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별표5])

* 음식물, 도축폐기물 첨가비중이 증가('12 : 30%, '14 : 50% 미만, '19 : 40% 행정예고)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지침에 지원대상 비료인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중 유기질비료가 부숙유기질비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 유기질비료 | 1,100 | | |
| 부숙유기질비료 | 1,100 | 1,000 | 800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자치단체와 관공서 대상 비농업용 유박비료 납품을 전면 중단시킴(유해성)

■ 문제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목적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정착인데도, 가축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수입유박 중심으로 지원되어 사업 목적이 변질

< 주요 변경사항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1. 가축분 퇴비 사용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단가) 삭제(20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1,200원/20kg - 2등급: 1,000원/20kg - 3등급: 700원/20kg • 퇴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1,000원/20kg - 2등급: 800원/20kg - 3등급: 500원/20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숙유기질비료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등급: 1,100원/20kg - 1등급: 1,000원/20kg - 2등급: 800원/20kg * 가축분 퇴비 차등 없이 모든 부숙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 통일 |
| 2. '가축분 퇴비'에 남은 음식물 등 첨가 허용 (2014.7.) | 가축분뇨 위주 | 남은 음식물, 도축폐기물 첨가 허용(50% 미만) |

* 수입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종전 1,300원/20kg지원에서 2019년부터 1,100원/20kg으로 하향 조정

- 전국 자치단체와 관공서 대상 비농업용 유박비료 납품을 전면 중단시켰지만 농업용 유박비료도 안전성 문제로 전면 금지 필요

■ 개선의견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3’ 부산물비료의 지정

- 가축분퇴비 정의 수정

| 현 행 | 개 정 (안) |
|---|---|
| 1. 부숙유기질비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비료의 종류</div> 01. 가축분퇴비 <정의> 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1. 부숙유기질비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비료의 종류</div> 01. 가축분퇴비 <정의> 가축의 분뇨를 100%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 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

- 사업목적에 맞도록 가축분 퇴비 및 퇴비를 구분하고 지원단가 조정
- 수입원료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축소

| 현행 | | | | 개정(안) | | | | |
|------------------------------------|-------|-------|-----|------------------------------------|-------|-------|-------|-----|
|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 | | |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 | | | |
| 구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구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 유기질비료 | 1,100 | | | 유기질비료 | 1,000 | | | |
| 부숙유기질비료 | 1,100 | 1,000 | 800 | 부숙유기질 | 가축분퇴비 | 1,300 | 1,100 | 900 |
| | | | | 비료 | 퇴비 | 1,000 | 700 | 500 |

-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별표5]

- 부산물 비료 중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구분 명시
- 가축분 유기질비료 내 가축분 100% 사용, 남은 음식물 등 사용 전면 금지
- 유박 사용 금지, 전면 삭제 요구

| | | | | |
|---------------|--|--|--|---|
| 현 행 |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 | | |
| | 비료의 종류 | 원료 | | 그 밖의 사항 |
| | | 구분 | 종류 | |
| |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2014. 7. 1.> |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2010. 12. 23.> |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그 밖의 동물의 분뇨 <2010. 12. 23., 2011. 11. 1., 2013. 10. 1.> | 1. 삭제 <2013. 2. 14.> <2009. 1. 12.> 2.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동물 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 <신설 2011. 11. 1.> 3. 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2010. 3. 29., 2011. 11. 1.> |
| 개 정 (안) |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 | | |
| | 비료의 종류 | 원료 | | 그 밖의 사항 |
| | | 구분 | 종류 | |
| | 02. 가축분 퇴비 및 퇴비 <2014. 7. 1.> |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2010. 12. 23.> |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그 밖의 동물의 분뇨 <2010. 12. 23., 2011. 11. 1., 2013. 10. 1.> | 1. 삭제 <2013. 2. 14.> <2009. 1. 12.> 2.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동물 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는 제외 <신설 2011. 11. 1.> 3. 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10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2010. 3. 29., 2011. 11. 1.> |

- 축종별 분뇨처리에 대한 정책·기술지원 강화
 - 가축분뇨 펠렛 연료 지원(악취저감 및 에너지화)

■ 개선의견

- 가축분뇨 사용 활성화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 농축산 부산물(가축분뇨 등)을 사용하여 토양에 적합한 양분을 농경지 등에 공급함
으로써 농업환경 보전, 농축산업의 안정적 영위 도모

폐사축 처리방안 마련

■ 소관부처(규제기관) : 환경부 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현황

- 한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은 규모에 따라 대부분이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지자체가 처리토록 되어있음
 - 1일 평균 배출량 300kg미만 발생시 생활폐기물, 300kg이상 배출시 사업장 폐기물 기준 적용
 - 생활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생활폐기물 중 동물사체(91-16-00)).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동물성 잔재물 및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소각재는 관리형 매립시설, 안정화처분, 고형화처분(사업장폐기물중 동물사체).

■ 문제점

-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이 지자체 주도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가 자부담으로 처리업체를 이용하는 등 비용 발생 및 위생·환경문제 야기

■ 개선의견

- 국고보조를 통해 폐사축 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 폐기물관리법에 동물의 사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 생활 폐기물 중 동물사체(91-16-00), 사업장폐기물 중 동물사체(51-17-01)의 처리방법이 달라, 정부의 폐사축 가이드라인 필요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

■ 기대효과

- 폐사축 처리에 대한 한우농가 애로사항 해소
- 폐사축 처리 지연에 따른 위생 및 환경문제 신속한 해소

05

원산지 표시 관련법 개정

■ 소관부처(규제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현황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련 법령 악용 사례 다수 발생
 - △△한우곰탕 사례 : 소비자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사례

- 주재료는 수입산 쇠고기에 한우 육수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한우맑은곰탕’, ‘한우육수 육개장’등 음식명으로 판매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5] 1의 나목 위반 소지

-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이 아닌, 별도 원산지 게시판에 쇠고기 부위별 원산지 표시, 소비자 혼동 초래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4] 2의 가목 1), 2) 조항 악용

- 2013년부터 도입된 원산지표시법 조항 자영업자 악용 사례 다수 발견

* 서울 25개 구 500개 음식점의 20% 정도 위반 소지(본 협회,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 쇠고기의 경우 축종(한우·육우·젓소) 및 등급별 판매가격 차이로 쇠고기 축종 및 등급 거짓표시 등의 불법 행위 개연성이 높음. 정육식당 등은 늘어가는 추세이나, 농관원은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 축종 거짓표시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으며, 등급표시 위반행위 단속권한도 전무함.

-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쇠고기 축종 및 등급 거짓표시에 대한 소극적 단속

* 한우협회 유통감시단의 축종 및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신고실적: 1,252 건(2019년 전국)

- 축종 572건, 원산지 680건

■ 문제점

- 원산지표시법 사각지대 악용, 처벌 수위 경미

- 자영업자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악용([별표 4], [별표 5] 관련)

- 원산지가 다른 재료를 혼합 사용하면서 주재료만 부각하여 음식명에 “한우(국내산)” 표기만을 강조, 소비자 기망

- 메뉴판·게시판과 별도 원산지 표시판 악용, 원산지 판별시 혼동

- 원산지표시법 관련 법령 내 미약한 처벌 조항

- 법 제14조 벌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행정처분으로 처리

* 시정명령(표시이행·변경·삭제), 거래 금지(위반농수산물 또는 가공품 판매) 위주로 처리

* 2회 이상 위반자에 한해서만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 공표

* 위 시정명령, 거래 금지 미이행자에 한해 징역·벌금형 부과(법 제16조)

-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사례 빈번
- 원산지 표시법 자체가 이원화(원산지 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종구분은 식약처)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음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 권한이 있으나, 원산지표시(국내산/수입산)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축종표시(한우/육우/젓소)는 지자체 단속으로서 농관원 단속권한 부재로 소비자 생산자 피해 발생
 -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소극적 단속과 농관원의 원산지 위주 단속으로 축종 및 등급이 거짓 표시된 쇠고기 유통가능성 높아, 소비자의 직접 피해 발생,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쇠고기 소비가 감소되어 한우산업의 위축이 우려됨
- 농관원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및 쇠고기이력표시 단속권한은 있으나, 축종에 대한 단속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의 효율성 저하*

* 고발사례: 전남 나주시 소재 00시장 식육점(식육판매업)에서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여 ‘00곰탕’(식품접객업)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농관원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 개선의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1. 공통적 표시방법 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 1. 공통적 표시방법 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고, 원산지 중 어느 하나만을 음식명에 사용할 수 없다. |
|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일 것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이하 삭제) |

| | |
|---|--|
| <p>라) 제3호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p> <p>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p> <p>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p> <p>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p> |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 <p>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p> <p>② (좌동)</p> |
| <p>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p>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p>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 <p>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 통신판매 판매 매체 표시방법 개선

| 현 행 | 개 정 (안) |
|--|---|
| <p>2.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p> <p>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p> | <p>2.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p> <p>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p>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조 개정

- 등급 및 축종에 대한 권한 부여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 만,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업무 중 쇠고기(등급 및 축종) 유통품에 대한 조사,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

-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권한 부여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원산지 표시) -중략-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원산지 표시) -중략- ③ 식품접객업, 식육판매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 및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

● 온라인 쇼핑물 대상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계도, 단속 강화 필요

■ 기대효과

-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식육유통시장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 소관부처(규제기관)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현황

- 정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만들었으나 지자체가 저마다의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제·개정 시 참고 기준으로 삼도록 위임해 정부 권고안 보다 훨씬 강화된 조례를 적용 중에 있음.

가축 사육제한 연구결과

| 구분 | | 제한거리 | 기존 권고안 |
|------|-----------------|--------|--------|
| 한육우 | 400마리 미만 | 50m | 100m |
| | 400마리 이상 | 70m | |
| 젖소 | 400마리 미만 | 75m | 250m |
| | 400마리 이상 | 110m | |
| 돼지 | 1,000마리 미만 | 400m | 500m |
| | 1,000~3,000마리 | 700m | |
| | 3,000마리 이상 | 1,000m | |
| 닭·오리 | 20,000마리 미만 | 250m | 500m |
| | 20,000~60,000마리 | 450m | |
| | 60,000마리 이상 | 650m | |

■ 문제점

- 가축 사육제한 거리 적용으로 인해 축산업 위축 불가피
- 과도한 제한으로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 예상, 거의 모든 축산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국내 축산업 자체를 제한하고 있음.

(예시) 충남 부여의 경우 5가구로부터 500m 제한시 전체 토지면적 중 86.9%가 사육제한 면적이 됨. *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전체 면적임.

(단위: Km2)

| 명칭 | 지역 | 150m 제한시 | 250m 제한시 | 500m 제한시 |
|------------------------------|-----|---------------|---------------|---------------|
|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5개면) | 석성면 | 12.92(42.25%) | 17.54(57.36%) | 26.65(87.15%) |
| | 세도면 | 16.54(39.46%) | 24.22(57.78%) | 34.44(82.16%) |
| | 임천면 | 18.75(43.45%) | 27.44(63.39%) | 39.19(90.82%) |
| | 양화면 | 12.56(38.33%) | 19.69(60.09%) | 28.09(85.72%) |
| | 초촌면 | 11.52(41.19%) | 17.02(60.85%) | 24.76(88.52%) |
| 평균 | | 14.46% 제한 | 59.89% 제한 | 86.87% 제한 |

- 외국 등의 경우
 - 축산 선진국인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와 같이 농림지역, 생산녹지, 생산관리 지역까지 대다수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국내 지자체 또한 환경부 권고안 이전에는 대부분 도시지역만 사육제한 하고 있었음 *권고안과 같은 민가로부터 적용은 10% 미만 추정

| 구분 | 도시지역만 제한 | 거리제한 적용 (민가 기준+행정구역 기준) |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등만 제한) | 근거: 환경부 연구결과 2011. 9 |
|----|-------------|----------------------------|-----------------------|----------------------------|
| 비중 | 51.8% | 19.9% | 28.3 | |

■ 개선의견

- 가축사육제한의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주거 밀집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 적용

- 건폐율 등과 마찬가지로 시행령/규칙에서 최대치를 지정하고 지자체에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필요
- 악취측정 결과에 따라 악취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완화기준 적용 필요
- 법령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 ----- ----- ------(좌동)----- ----- ----- ----- ----- ----- ----- ----- |
|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1. 도시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 기대효과

- 가축 사육제한 거리 제한 완화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확대
- 축산농가에 과도한 규제 해소

07

수 의사 법 개정

- 소관부처(규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수의사법

■ 현황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

■ 문제점

- 산업동물의 특성에 맞는 기준 적용 필요
 - 한우 거세시 처방전 문제
 - 산업동물은 반려동물 같이 동물병원을 갈 수 없음
 - 한우 거세 처방전을 이유로 수의사가 직접 진료나 검안시 대기시간 소요
 - 한우는 7~8개월령 거세 후 30개월령 전후로 출하하므로 잔류 문제 해소
 - 송아지 설사 처방전 문제
 - 생후 3개월 이내에 치료가 이루어져 배경과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
- 처방전 편법 발급 문제 : 처방전 전문 수의사 성행
- 산업동물 수의사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 축산농가 처방전 의무 발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중
 - 주말, 야간 등에 긴급 상황 발생시 부담 가중

■ 개선의견

- 한우의 경우 거세와 송아지 설사와 같은 일상적인 치료에 대한 현장방문 처방전 발급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원격진료, 전화진료 등을 통해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건의
- 법령 신설 : 수의사법 제12조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 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 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 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p> <p>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 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 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 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 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 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p>제12조(진단서 등) <신설></p> <p>⑥ 다만 가축의 경우 단 순 진료 및 처치에 대한 일 상적인 치료를 위해 처방 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 격 진료, 전화진료를 통 해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다.</p> |

■ 기대효과

- 단순 질환 및 처치에 대한 처방전 발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노력, 비용, 시간 절감

21대 국회에 바란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요구사항 국회에 전달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

송아지 안정제 개편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등

지난 7월 21대 국회 농해수위가 재구성 됐다. 우리 협회는 7월 중으로 국회 상임위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농해수위 의원실을 모두 방문해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이 주관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제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에서도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한, 7월 27일 열린 첫 전체회의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도 공익직불제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식량자급률(식량안보), 농업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질의가 주로 쏟아진 가운데,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조명되기도 했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 추세 출하량 증가로 가격 하락 소값 안정 대책 마련 시급

연도별 한우 수급전망

(단위:천두)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총 사육 | 3,078 | 3,192 | 3,260 | 3,300 | 3,312 |
| 1세 미만 | 906 | 931 | 951 | 975 | 982 |
| 가임암소 | 1,484 | 1,541 | 1,577 | 1,582 | 1,571 |
| 도 축 | 765 | 783 | 845 | 891 | 928 |

<농촌경제연구원>

가임암소수와 송아지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3년까지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암소 도축마릿수는 증가추세이나, 암소 도축마릿수보다 암송아지 생산 증가폭이 더 커 2~3년간은 가임암소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사육마릿수는 308만두로 집계된다. 올해 319만두, 내년인 '21년 326만두, '22년330만두 등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점쳐진다.

도축마릿수는 '20년 78.3만마리, '21년 84.5만마리 '22년 89.1만마리, '22년 92.8만마리로 '19년 76.5만마리 대비 각각 2.4%, 10.5%, 16.5%, 21.3% 증가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수소(거세우) 출하량은 향후 6개월(11월)까지는 출하량 감소가 예상(25개월령 이상)되며, 추석 이후 수소(거세우) 점차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가격은 공급량 증가에 따라 하락국면으로 접어들어 '23년 이후에는 경영비 수준까지 하락할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농해수위 의원들을 접촉하고,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도축두수 전망>

(단위:천두)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평 년 | 97 | 52 | 56 | 62 | 58 | 55 | 56 | 73 | 80 | 56 | 58 | 70 | 773 |
| '19년 | 107 | 35 | 50 | 58 | 58 | 51 | 59 | 88 | 58 | 66 | 59 | 77 | 765 |
| '20년 | 88 | 47 | 53 | 61 | 58 | 57 | 60 | 56 | 105 | 60 | 56 | 82 | 783 |
| '21년 | 107 | 37 | 57 | 70 | 64 | 60 | 69 | 97 | 64 | 68 | 63 | 89 | 845 |
| '22년 | 115 | 39 | 61 | 75 | 68 | 64 | 73 | 103 | 67 | 71 | 65 | 91 | 891 |
| '23년 | 121 | 41 | 63 | 77 | 71 | 66 | 76 | 106 | 69 | 74 | 68 | 96 | 928 |

01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 과거 수급관리 문제점

- 중장기적 제도 및 대책 미비
 - 2012년 한우 파동시 정부에서 암소 도태 추진했으나, 불황이 예견된 가운데서도 사전 대응은 없었으며 사후 대응만 추진 (암소 20만두 도태사업 등 사후 처방 추진)
-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 부족
 - 정부·협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은 일관성, 지속성 필요
 - 정책 신뢰도 하락 시 사업 동참 어려움

* 2019년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 사업 추진 후, 2020년 사업 보류 중

- 미경산우 사업의 현장 상황 이해 필요
 - 소규모 번식농가의 현실적 참여가 낮고(소규모 농가에는 송아지생산이 유리), 사업 효과를 감안할 때 전문 비육농가 참여를 통해 신속한 수급조절 가능
 - 번식농가가 비육할 경우 생산비가 높고 비육 사양관리시 손실우려, 비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추진 홍보로 인해 현장의 미경산우 비육이 상당히 증가
- 각 주체별 선제적 수급조절 대책 공동대응 부족
 - (농가) 자조금으로 선제적 수급조절
 - (정부) 정액을 이용한 암소감축 등 공동대응 필요
 - ⇒ 수급조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응 시도 필요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미경산우 표시제 미비

■ 당위성 : 가장 효과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

- 농가들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업이자, 이미 전농가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
- 기존 사업 문제점 보완 및 개선사항 있다면 적극 보완하여 추진
- 2019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참여 농가 분석
 - 참여농가 규모 : 50두 미만 농가는 28.5% 참여,
전업농 규모 50두 이상은 71.5%가 참여
 - 참여농가 미경산우 사육두수 : 50두 미만 농가가 보유한 미경산우 6,275두로 9.2%, 50두 이상 농가가 보유한 소는 61,671두로 90.8%로 나타남.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 분석

| 사육두수 | 농가 | 비율 (%) | 전체 마릿수 | 해당농가 보유 미경산우 | 비율 (%) | 미경산 (사업참여) | 비율 (%) |
|---------------|-------|--------|---------|--------------|--------|------------|--------|
| 0 ~ 20두 미만 | 148 | 8.9% | 1,600 | 912 | 1.3% | 495 | 5.7% |
| 20 ~ 50두 미만 | 327 | 19.6% | 11,938 | 5,363 | 7.9% | 1,263 | 14.6% |
| 50 ~ 100두 미만 | 500 | 30% | 36,723 | 13,109 | 19.3% | 2,429 | 28% |
| 100 ~ 300두 미만 | 603 | 36% | 97,550 | 35,207 | 51.8% | 3,769 | 43.6% |
| 300두 이상 | 91 | 5.5% | 39,386 | 13,355 | 19.7% | 699 | 8.1% |
| 합계 | 1,669 | 100% | 187,197 | 67,946 | 100% | 8,655 | 100% |

<전국한우협회 집계자료>

※ 양수·양도로 인한 소유주 변경으로 8,655두와 8,713두 간 차이 발생

참고 미경산우 1두의 감축 효과

- 미경산우 1두는 3년간 약 2.5두, 5년간 약 4.7두 감축 효과
 - 2018년 출생 미경산우가 분만간격 14개월, 70% 송아지 생산 가정
 - (3년간) $3.6\text{두} \times 70\% = 2.5\text{두}$, (5년간) $6.8\text{두} \times 70\% = 4.7\text{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 제도 개요

-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거래가 하락시 차액보전, 번식농가 경영안정 도모

| 구 분 | 확대단계 | 적정단계 | 위험단계 | 초과단계 |
|---------|----------|------------|-------------|---------|
| 가임암소 두수 | 90만두 미만 | 90~100만 미만 | 100~110만 미만 | 110만 이상 |
| 최대 보전액 | 400천원/마리 | 300 | 100 | 미지급 |

- 전년도말 한우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미지급 ~ 40만원)

* 안정제사업 가입율: ('11) 86.0% → ('12) 67.6 → ('14) 40.9 → ('16) 28.6 → ('19) 12.6

■ 문제점

- 발동될 수 없는 제도로 농가 원성 고조
- '12년 설정된 안정기준가격(185만원)은 8년 경과로 송아지 생산비(3,524천원)의 52%, 경영비(235만원)의 78%, 최근(6.29.) 송아지가격(3,923천원)의 절반이하(47%)로 발동이 불가하여 농가로부터 철저히 외면('19년 가입율 12.6%)
 - '12년 안정기준가격 : 송아지 생산비(3,061천원)의 60%, 경영비(2,032천원)의 91%
- 가임암소가 90만두 미만이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수 없고, 110만두 이상이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전금은 지급될 수 없도록 설계된 현행 지침은 한우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탁상 행정

* 송아지 가격이 '12년 132만원(가임암소 122만두), '13년 147만원(가임암소 116만두)으로 안정기준 가격(185만원) 이하로 크게 떨어졌으나, 가임암소 기준에 따라 보전금 미지급

■ 건의사항(정부)

1.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발동조건 개선 및 안정기준가격 현실화
 - 발동조건 : 가임암소 기준 삭제

*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발동된다는 정책 신뢰 필요

- 안정기준가격 : 185만원 → 293만원

* (송아지 생산비 3,524천원 + 경영비 2,352천원) ÷ 2 = 2,938천원

* 송아지 생산비, 경영비 출처 : 통계청(2020년)

2.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최대보전액('12년 설정, 8년 경과) 현실화

- (현행) 40만원/마리(안정기준가격 185만원의 21.6%) →

(개정) 63만원(21.6% 적용)

참고자료

미경산우 비육지원에 대한 한우농가 의향조사

(수급조절 및 미경산우 비육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한우농가 3778명을 대상으로 전국한우협회가 2019년 10~11월 설문조사

- 수급조절방안에 대한 의견 -

● (농가 우선사항)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수급관리'

(단위 : 명, %)

| 구분 | 합계 | 수급관리 | 종축개량 | 질병관리 | 기타 |
|----|-------|-------|-------|------|-------|
| 빈도 | 1,474 | 1,241 | 1,100 | 55 | 3,870 |
| 비율 | 38.1 | 32.1 | 28.4 | 1.4 | 100 |

● (미경산우·저능력우 수급조절 효과) 수급조절 효과 67% 공감

(단위 : 명, %)

| 구분 | 합계 | 매우 효과적이다 | 효과적이다 | 보통이다 | 효과적이지 않다 | 전혀 상관없다 |
|----|-------|----------|-------|-------|----------|---------|
| 빈도 | 3,894 | 1,049 | 1,563 | 1,002 | 215 | 65 |
| 비율 | 100 | 26.9 | 40.1 | 25.7 | 5.5 | 1.7 |

● (저능력암소 사업의 효과 이유)

40%가 암소개량 촉진·가임암소 감축 때문에 효과적이라 생각

(단위 : 명, %)

| 구 분 | 빈도 | 비율 |
|--------------------------------------|-------|-------|
| 합계 | 3,827 | 100.0 |
| 6~8개월 내에서 단기적으로 가임암소수를 빠르게 줄일 수 있어서 | 886 | 23.2 |
| 암소개량을 촉진하면서 가임암소를 줄 일 수 있어서 | 1,539 | 40.2 |
| 농가 암소의 능력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 후 도태시킬 수 있어서 | 1,093 | 28.6 |
| 기타 | 309 | 8.1 |

03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 도입 필요성

-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소 값 하락 우려
- 한우 송아지 가격이 높아져 큰 소(비육우)와 송아지 가격차가 좁혀짐
 - 비육우 마진 축소와 송아지 확보 어려움으로 일관사육 한우농가 확대
- FTA체결로 관세('20년 미국산 관세 16%)가 매년 낮아지고 미국산부터 2026년 관세 제로화(0%), 한우 가격경쟁력 하락, 농가불안 심화
- 소 값 하락에 대응하고 한우산업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절박(일본은 “마루킨”이라는 육용우 비육경영제 운영중)
- 비육우경영안정제가 시행되면 농가소득이 보장되어 한우두수와 쇠고기공급량 증가로 한우산업의 기반(파이)은 확대되면서 소비자 가격은 낮아져 서민이 한우고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한우고기 대중화 가능

- 미경산 암소비육 등 수급조절과 병행시 두수 증가 조절 및 재정투입 최소화 가능
- 가격폭락 대비 안정장치가 마련, 농가 불안해소로 한우사육에 매진, 한우산업 발전
⇒ 비육우경영안정제는 ① 생산자 ② 소비자 ③ 정부에게 만족을 주는 한우정책

■ FTA에 따른 한우산업 영향

-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 호주 등 FTA에서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이 한우
 - 관세: ('11년) 40% → ('26년) 0%
→ 향후 개도국 지위 상실시 관세 빠르게 감소
 - 현실적으로 발동 불가한 세이프가드(30만톤)
 - '19 미국쇠고기 수입 23만톤(사상최대)
 - WTO 개도국 및 선진국인 일본·호주 관세 1/3 감축 → 우리나라 관세 0%
- 쇠고기 수입증가로 한우기반 붕괴 우려와농가 위기 의식 고조
 - 쇠고기 수입량: ('09) 197 → ('19) 427천톤, 116%↑ 사상 최대량 수입
 - 쇠고기 자급률: ('09) 50 → ('19) 36.5%, 13.5%p↓
 - 수입쇠고기 향후 10년내 무관세로 수입
 - 미국·EU('26년), 호주·캐나다('29년)

■ 한우와 화우산업 비교(전상곤 교수 자료)

- 비육우 사육 품종별 점유비

| 국가 | 총사육두수 | 품종별 사육두수 | 비율 |
|----------|---------|---|------------|
| 한국(2018) | 3,113천두 | 한우 2,962천두(95.1%) 육우 151천두(4.9%) | 한우:육우=19:1 |
| 일본(2017) | 2,499천두 | 화우1,639천두(65.4%) 기타육용 25천두(1.0%) 유용종 313천두(12.5%) 교잡종 522천두(20.9%) | 화우:기타=2:1 |

- 일본은 화우 2/3, 교잡종+유용종 1/3로 쇠고기 수입 급증시 교잡종 등이 완충 역할을 하지만, 한우는 전체 비육우의 95.1%를 차지하여 쇠고기 수입 급증시 완충제

가 없어 한우는 직접적인 영향(피해)를 받는 구조로 화우보다 불리

- 소 1두당 인구수: (한우) 18.1명, (화우) 72.3명 / 한우보다 299%↑
- 소 1두당 GDP: (한우) 506천달러, (화우) 2,891천달러/한우보다 471%↑
 - 국내 소비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화우가 한우보다 유리, 불리한 한우산업의 취약점을 비육우경영안정제 등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성 대두
- 일본의 육용우 관련 예산(2018년 기준): 1,352억 엔(1조 3,000억 원)
 - 번식우 경영안정 예산: 375억엔(3,700억 원)
 - 비육우 경영안정 예산: 977억엔(약 1조 원)/ 비육우 1두당 400천원
 - 한우는 화우보다 국가의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빠른 기간내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이 시급함
- 한우산업과 화우산업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후계 인력 확보 어려움, 소규모 농가 중심 감소세
 - (차이점)
 - 일본 화우는 ① 번식과 비육에 다양한 경영안정 프로그램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육 호수는 줄지만 사육 두수는 안정적으로 유지 ② 일본은 화우와 수입육 사이에 육우(교잡종+유용종) 산업이 수입쇠고기에 완충장치 역할
 - 한국은 한우가 전체의 95.1%, 육우는 4.9%에 불과하여 한우와 수입육 사이에 완충장치가 없어 수입이 확대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속도 검사 등 환경 규제강화로 일부 농가는 폐업이 불가피 하여 사육 호수는 감소 폭이 크고, 사육두수는 규모화 진행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우산업 존재 이유와 가치(한우인 모두가 공유·보완·홍보)

- 한우는 한민족과 5천년을 함께해온 한민족의 자존심이자 대체(외국산 수입)가 불가능한 토종 유전자원으로 보존·발전해야 할 가치 있는 가축
 - 젓소, 돼지, 가금류 등 종자가 수입되고 있는 타 가축과 근원적 차이
- 축산농가 10만 명중 한우농가가 9만 명(90%)으로 한우가 축산업의 주력 가축이며 쌀과 함께 농촌경제를 이끄는 농업·농촌의 버팀목이자 농촌의 현금 역할

- 한우고기는 국민이 가장 먹고 싶고 선물 받고 싶은 식품, 단백질원
- 한우는 단기간(30년)에 일소(역용우)에서 고기소(육우)로 전환한 세계에서 유일한 소 (일본 화우 200년 이상 소요)
- 한우는 지속가능한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 농업”에 적합한 가축
 - 경축순환농업은 농특위 과제로 선정('19.12.3.)되고 농축산업계 관심사
- 9만명의 한우농가가 전국 농촌의 모든 지역에 균형적으로 분포되고 지역 경제의 중심에 있어 한우는 사라지는 농촌(지방 소멸)을 살아가는 농촌(지방 회생)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농업 품목
 - 고령화로 30년 뒤에 전국 시군의 1/3이 없어진다(한국고용정보원)
 - 고령화율 높은 지역: 경남 합천, 경북 군위·의성, 전남 고흥

■ 일본 육우산업 안정제도

- ①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마루킨): 육용우농가 경영안정도모
- ② 육용우 번식경영안정 지원사업: 육용우 번식 경영 기반 안정 도모
- ③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 송아지 가격하락 대응, 안정적 송아지 생산 유도
- ④ 송아지생산 확대장려 사업: 육용 전용종 번식농가 송아지생산 확대의욕 제고
- ⑤ 지정식육가격 안정제도: 농축산진흥기구의 수급조절로 육류가격 안정
- ⑥ 배합사료 가격안정 대책사업: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한우산업 위기

- FTA 피해가 가장 큰 한우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자국 산업 보호에 소홀
 - 한우 등 축산이 경종농업보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에 소극적
- 한우는 수입의존형, 국제곡물가 등 외부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매우 크며 대부분 고령농(44.7%)으로 기반유지에 어려움
 - 고령화 및 FTA 폐업지원 등으로 한우농가는 감소하고 규모화는 급격히 진행
 - 한우농가: ('99) 350천호 → ('09) 169 → ('19) 89
 - 호당 한우사육: ('99) 5.6두 → ('09) 14.7 → ('19) 34

- 사료값 인상 등 경영 불안정을 규모화로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고령농(65세이상 44.7%) 은퇴시 한우기반 유지와 송아지 확보에 어려움 예상
- 최근 두수 증가로 가격폭락에 대한 사육농가 불안 심리와 위기감 고조
 - 한우 사육두수: ('99) 1,951천두 → ('09) 2,477 → ('19) 3,055
 - '11~'14 한우두수 증가로 한우농가 두당 100~250만원 막대한 손실 경험

■ 건의사항

- 한우비육우 생산비 손실을 보전(100%)하는 '한우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 분기별 비육우 두당 평균조수익이 3년 평균생산비 90%이하 하락시 차액 보전
- 축산법에 '비육우경영안정사업' 조항 신설 또는 '한우산업진흥특별법' 제정
 - 조수익이 평균 생산비보다 낮아질 경우에 예산투입, 평상시 재정 투입 없음
- 한우산업의 사육두수 및 소비량 증감 등 미래 예측과 전망을 정부 책임하에 추진하고, '한우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집행
 - 반도체, 자동차나 축산업의 주력산업인 한우산업의 미래를 예측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설계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만의 신성한 권한이자 의무, 생산자단체 등 산업현장에 미래 예측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신성한 권한 포기
- 산지 소값 하락으로 혼란한 시기가 아닌, 한우가격이 안정된 현재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개선 및 비육우경영안정제사업 도입 적기
 - 평소에 전쟁 준비한 이순신(한산도대첩)과 전쟁 준비하지 않고 의주까지 피난간 선조(이율곡 10만 양병설)를 난중일기와 징비록 등 역사가 증명,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부의 한우공급과잉을 바라보는 시각

수급조절 위한 생산자단체 노력까지 ‘무위로’

목표 이루기 위한 수단·방법 많을수록 좋아

모든 주체 적정수준까지 번식개체 줄이는 데
동참시켜야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 한우 사육두수와 도축 마릿수가 계속 늘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현장에선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이렇다 할 방침이 있다면 불안한 마음이 덜할 텐데, 지금 당장에 소 값이 좋아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불안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청년한우인 서승호씨의 말이다.

한우는 일명 ‘비프사이클’이 있어 가격이 한번 하락하면 크게 망할 수 있다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생활을 접고, 수년전 한우사육농가로 귀농한 서 씨는 요즘 한우사육마릿수의 전망치 발표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토로했다.

농경연 축산관측팀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317만~318만 수준에 이르고, 내년이면 330만 마리에 육박한다. 2022년에는 335만 마리 안팎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도축 마릿수는 올해 79만 마리, 내년 85만~86만, 2022년 94~95만 마리로 급증하면서 사2021년 한우가격은 1만5,00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한우사육두수 과잉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당장에 내년부터 한우공급두수가 예년의 출하두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한우공급과잉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는 답답하다 못해 미온적이다.

심지어 정부는 한우협회가 자조금을 활용해 저능력 미경산우의 수수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당초 사업을 승인해 놓고도 이를 번복하는 등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사업에 제동을 걸고, 사업타당성을 두고 수개월째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산우 수급조절을 통해 소 값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농협의 계획도 불허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농경연과 각종 전문가들이 내놓은 각종 전망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며, 실질적인 한우 공급량 증가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우농가들에게 전가될 공산이 커진다. 더욱이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발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된 송

아지생산안정제도 등 농가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어서 한우농가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한우 수급조절 사업 손 놓은 정부

농식품부는 미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수급조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1년에 시장에 출하되는 미경산암소가 7~8천두에 달하는 등 굳이 30만원의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암소는 송아지생산에서 자연 격리되어 시장에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같은 단순논리에서 시각을 조금만 확장해도 효과적인 수급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비육·출하되는 암소가 7~8천두 라면, 여기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확장할 경우 미경산 암소의 추가 비육과 출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와 한우협회가 추진한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총 8,700두가 약정을 맺었다. 당초 목표로 한 1만여두 도태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인데, 이는 송아지 가격이 고공세를 지속하며 미경산우 비육 지원의 유인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번식농가들의 경우 송아지를 비육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데다 암송아지를 번식우로 사육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에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업의 대상을 ‘번식농가’로 한정하는 등 사업 참여의 대상에 선을 그은 것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다.

생산자단체 노력까지 번번이 ‘방해’

수급조절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비육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논란은 애당초 무의미했다. 번식농가든 비육농가든 모두 암송아지 비육에 참여시키는 게 수급조절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비육농가들이 암송아지를

구매해 비육하는 부분에 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자조금 구성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비육농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한우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을 특성농가인 비육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우협회가 수급조절을 위해 2018년 처음 대안으로 내놓은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대해 번식농가들만 참여하도록 정한 정부의 방침은 수급조절 효과를 반감시키는 조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상황인데다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는 송아지 가격은 비록 비육하기로 약정맺은 송아지라 하더라도 번식우로 전환하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는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번식에 참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상했던 수급조절 효과를 떨어뜨릴 여지가 커지게 되는 등 수급조절의 허점이 생길 우려도 커지게 된다.

효과적인 한우의 수급조절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한우농가 경영 안정대책은 농가의 집단행동 등 위험이 눈앞에 닥칠 때야 수급조절에 나서는 등 문제발견에서부터 정책 시행까지 최소 수개월의 시차 발생으로 피해를 키웠은 측면이 적지 않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많을수록 좋지만 정부는 한우의 수급조절과 수급안정을 위한 이렇다 할 안을 내놓는 대신에 업계가 내놓은 수급조절안에 대해 방법과 대상이 정교하지 못하다며 수급조절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금처럼 불황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선 번식농가, 비육농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수급조절에 골몰할 때이다.

모든 주체가 적정한 숫자까지 번식 가능한 개체를 줄이는 데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전 한우업계가 수급조절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와 행정이 요구된다.



우리 농업은 1980년대까지 정부가 사실상 주도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식량의 자급이 필요했기에 품종개발 및 보급, 농지의 확보, 용수의 공급, 쌀의 유통을 정부가 사실상 책임졌고, 부족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60년대 말부터 축산진흥정책을 펼쳐왔다.

축산물 등의 수입은 매년 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들여오도록 했고 되도록 자급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1980년대까지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쇠고기

자조금 개혁 방향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정부 통제 축소하고, 농가 조성하고
집행하는 원칙 강화해야!

는 2001년 나머지 축산물도 1996년에 모두 개방하게 된다.

나머지 농산물도 쌀을 제외하고는 관세만 내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히
고율 관세로 묶어 놓은 품목도 시장접근물량이라 하여 일정한 양은 저율 관세 또는 무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였다.

시장을 개방했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더는 우리 농축산물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우리 농축산물을 수입 농축산물보다 노골적으로 우대하
는 정책을 펼치면 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조금 제도가 만들어졌고, 정부가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호를 거 뒤들이는 만큼 자조금은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시장개방 이제 농가 스스로 도와야!

자조(自助)는 자기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애쓴다는 의미와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으로 서겠다는 게 자조이다.

축산업계는 1980년대부터 자조를 이야기했다. 자신들의 발전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왜냐하면, 1980년대는 정부가 시장개방을 검토하는 시기였고, 외부로부터 축산물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개도국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시장개방 이후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섰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인식했고, 정부에 제도로써 이를 뒷받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축산농가들의 요구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해 실현되었고, 정부는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모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한정되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농림수산부 장관은 특정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의 1989년 자조금 구상

현행 자조금은 소비촉진사업을 중심으로 농가 교육, 소비자 정보제공, 조사연구사업 등에 쓰이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 몇몇 품목에서 수급조절 사업에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매일경제신문 1989년 6월 21일 자 15면 ‘농축산 자조금제 도입’이라는 기사는 당시 정부가 자조금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자조금은 농축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기준가격을 상회할 때 가격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들로부터 징수해 적립하고 가격 하락 시 이를 보전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농축산물의 수매 및 비축 시행, 유통구조개선 사업, 수출 결손 보전, 가공산업 육성, 소비촉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3조에도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 운영한다고 나왔다.

그리고 이 자조금의 조성 and 운영은 생산자단체가 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제도를 설계할 당시의 목표였다.

사실상 농림부 주도의 축산정책 중 상당 부분을 생산자 조직에 위임하겠다는 게 자조금을 도입하던 당시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처음 의도와 달리 초기 자조금은 소비촉진 활동과 조사연구사업을 통한 정책개발에 대부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도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해 지속해서 운영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낙농자조금이 1998년 큰 성과를 내고,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에 성공하면서 자조금의 사용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업 초기에는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 배정에도 버거웠으나 점차 농가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기금의 규모가 커졌고, 이후 농가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조사연구사업, 소비자 정보제공, 수급조절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수급조절 위원회도 자조금 산하에 두면서 초기 구상처럼 되어가는 듯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자조금 통제 강화시도

초기 자조금 도입 당시 정부의 구상은 민간이 축산행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우리 농축산물을 수입품보다 우대하거나 보조금을 많이 지급할 경우 WTO에 제소당할 수 있으므로 농가들의 거출금과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자조금 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자조금이 활성화되기 전의 생각이었고, 막상 2000년대 축산 의무자조금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이를 통해 축산생산자협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조금 운영의 큰 틀을 바꾸려 했다.

축산자조금은 2000년 초반 축산단체들의 대 농정활동의 결과물로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기존 생산자협회들이 농가 선전과 교육을 통해 한돈, 한우, 낙농, 양계 순으로 의무자조금이 출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조금에서 축산단체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2009년 농림부는 축산생산자협회는 일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자조금은 모든 농가가 참여하는 만큼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축산생산자협회의 자조금 관리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려 했다.

대신 전문 경영인이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위원회도 법인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이외에도 관리위원의 대의원 직접 선출, 관리위원장 대의원 직선제 등 여러 가지가 개혁에 포함되었는데, 그중 가장 핵심은 법인화와 전문경영인제도였다.

당시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축산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축산단체장 자조금 위원장 겸직 금지, 자조금의 법인화는 막아내게 되었다.

2020년 다시 법인화 이야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돈·한우·우유·육우·오리·달걀·닭고기 등 축산자조금 사무국

실무자로 구성된 ‘축산자조금 발전협의회’를 열고 축산자조금 개선 방향을 밝혔다.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들이 낸 기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자금인 만큼 정부가 자조금 용도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농림부 관계자가 밝힌 것이다.

축산자조금의 용도를 기존 사업에 방역, 축산환경 개선, 수급조절 등을 추가해 해당 용도에 대한 사업 비중을 강화하고, 축산자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연관이 없는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시도가 10년 만에 다시 시도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회의 내용이 각 단체로 보고되고 축산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발 빠르게 큰 의미 없는 회의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2009년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자조금 통제 강화는 지금도 계속 검토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조금 독립성 강화?

농림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자조금의 독립성이란 축산생산자협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 한다.

축산생산자협회는 일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자조금은 전체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생산자협회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자조금 사업 자체가 축산생산자협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축산단체의 영향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절차적으로 전체 농가의 총의를 물어 운영되는 만큼 독립성이 없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지금 생산자협회에 소속된 농가들이기 때문이다.

자조금의 법인화 그리고 정부의 역할 강화라는 기조는 자조금 운영 주체를 축산농민에서 정부로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금도 자조금의 구성과 그리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축산단체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조금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인해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결이 끝난 사업계획도 마지막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까지 통과한 자조금 예산에 대한 승인을 여러 차례 보류하면서 이미 통과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일도 있었고, 정부의 사업승인까지 받은 사업도 집행단계에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지금은 사업기획단계서 어떤식으로든 농림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대의원회까지 통과한 사업계획이 사후 수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법인화, 정부의 역할 강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조금 요직 농피아 자리로 전락?

정부가 자조금을 독립법인으로 만들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권한인 인사권에까지 영향을 끼치겠다는 요량으로 보인다.

이미 사업계획, 예산 수립, 사업의 집행에 농림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농림부의 역할을 강화할만한 것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자조금이 법인화될 경우 자조금 조직은 퇴임 농림부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위원회인 자조금위원회는 법인화와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고 주요 보직을 농림부 출신들이 차지하게 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민간주도로 운영될 것처럼 보였던 낙농진흥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모두 세월이 흐르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주요 요직을 퇴직 농림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말았는데, 결국, 축종별 자조금 단체도 이러한 전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역할 축소가 ‘자조금 개혁’ 방향

몇 년 전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좌초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다. 몇몇 작품을 문제 삼으며 부산시가 특정 영화의 상영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영화제 집행사무국은 부산시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부산시가 집행위원장을 해촉했고, 영화단체들은 부산국제영화제 참여를 보이콧 하는 등 극한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면서 최근 정부는 새로운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로 요약된다.

문화 예술계 사람들은 우수계 소리로 우리나라 드라마와 K팝이 해외에서 호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이 산업에 대해 잘 몰라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정부가 주도했다면 예술 문화인들의 창작성은 줄어들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이 생산되면서 다양성을 상실했으리라는 것이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류라는 콘텐츠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자조금은 처음 설계될 당시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초기 정부의 자금지원도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조금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업뿐만 아니라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다.

이는 자조금의 진정한 발전 방안이 아니다. 자조금의 독립성은 축산단체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정부의 간섭에서의 독립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 될수록 자조금은 조세적인 성격으로 변질하면서 농가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농가 스스로 내고, 농가 스스로 운영한다는 자조금의 원칙을 깨뜨리게 되면서 자조금 기금 조성에 적극성을 띄었던 농가들은 소극적으로 변하다가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조금만큼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농민이 주체가 되어 조성하고, 농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는 원칙이 더 확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농민의 바람일 것이다.



전북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전북한우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한우산학연합력단,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지난 7월 22일 소노벨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공동 개최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승형 삼농연구소장은 발표자로 나서 한우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한우 경쟁력 강화 위한 ‘클러스터’ 도입 물결

한우 단지, 산업 질적 성장 기대
환경·방역·동물복지 등 신뢰도 제고
거버넌스 확립·중간 지원 조직 필요

그는 “국내 한우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한우산업 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축산 클러스터 도입은 한우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전북 여성청년분과위원장(문현주·이 휘)은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한우농가 스스로 대응책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으로 이웃과 공감하는 축산환경을 만들고 정부에 한우산업 안정화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2년에는 축산법 일부를 개정(2012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전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축산클러스터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경북대)」, 2014년 「국가축산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KREI)」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선행연구 및 축산클러스터 부지 확보 이후의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한우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제안하여 전북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한우산업 클러스터 도입 필요성

전북한우산업의 질적 성장, 경쟁력↑

환경·방역·동물복지 등 신뢰도 제고

한우의 사육두수 증가 및 규모화 진전, 생산액 증가 등 양적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반되는 악성가축질병, 분뇨, 악취 등의 환경문제에서 한우산업이 지역사회 인식 및 국민적인 호응을 얻으려면 철저한 차단방역, 밀집사육 방지 및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ICT 융복합 축사시설 및 생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민원심화 지역 내 축사를 이전하여 악취방지 및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을 할 수 있는 입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새만금클러스터 단지이고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



이 단지에 생산부터 유통·소비의 전 단계를 통합안전관리해 안전성을 높이고 유통구조의 혁파로 유통비용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전북의 우수한 한우를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려면 역량집중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집적이익과 관리를 기반으로 공고히 다져나간다면 시장확대 가속화 속에서도 전북한우의 경쟁력은 우뚝 솟아날 것 이란 것이 이승형 삼농연구소장의 설명이다.

네덜란드 클러스터 사례 주목 효율, 환경친화 모두 잡았다 향후 축산테마파크 활용도

국내에도 이미 농축산식품 클러스터 사례가 꼽히고 있다. 한우산업클러스터 또한 강원, 충북, 경북 등 타 지역에서도 진행중이다. 클러스터 사업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보다 지역

연합사업, 공동이용 및 공동사업 등등 뚜렷한 구분점을 짓기도 모호한 것이 사실.

해외의 경우 혼합농장프로젝트 정도로 정리된 사례가 네덜란드에 있다. New Mixed Farm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지역에 축산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하는 발전소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 동물복지까지 고려한 축산업 최대 단지인 셈이다.

이승형 연구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네덜란드 New Mixed Farm는 축사를 포함한 건물 벽면에 식물재배로 건물 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등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가축분뇨는 즉시 관을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이동하여 발전기 전기를 공급한다.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로 농장온도를 유지하고 분뇨발생즉시 연결된 관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분뇨냄새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한다.

이같은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우 클러스터 사업이 지역 내 기업·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제품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평적 네트워킹을 총괄하면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우 클러스터는 한우 내수 진작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 축산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인천에서 열렸던 세계수의사대회는 ‘원 헬스, 뉴 웨이브(One Health, New Wave)’를 주제로 항생제 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최됐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의원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은 기조연설에서 “동물복지와 인류의 건강은 하나”라며 “항생제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의미의 One Health 개념을 훨씬 전부터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묵묵히 한 우업계와 동고동락한 기업이 있다. 바로 단바이오텍이다.



단바이오텍의 가치의 출발

면역력 증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송아지 면역력 증강 = ‘아이지락’

초유급여보다 설사 발생률 감소시켜

호흡기질환도 줄여 약품비 절감도

“인수공통 질병이 전체 질병의 약 70%를 넘고 있죠..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설사같은 여러 질병에 취약해지거나 증체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죠.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항체를 비롯한 생균제, 박테리오파지 같은 항생제 대체제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항생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단바이오텍 박종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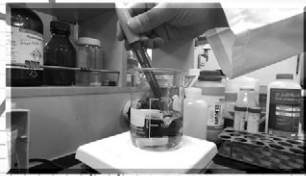

(주)단바이오텍은 송아지, 자돈, 양계의 면역증강과 설사예방을 주력으로 하는 난황항체 개발 전문기업이다.


2000년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이래 항생제 대체제 개발 일념으로 사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제품 출시

- 연구과제 : 송아지 설사병 예방치료용 난황항체 개발
- 수행기관 : (주)단바이오텍, 단국대학교
- 연구기간 : 2007년~2008년
- 연구결과 : 송아지 설사원인균에 대한 특이항체 생산 및 효능검증
- 연구성과 활용 : 특이 난황항체 함유 송아지 설사 예방제 제품화

아이지락 송아지, 아이지락 골드, 초유플러스, 아이지락 스타터
 아이지락 파워30, 아이지락 프리미엄 출시











(주)단바이오텍
부생명과학연구소
Tel. 041-556-0852

정부출연 과제 및 실적

| | | |
|-------------------|---|------------|
| 1998 ~ 2000 | 장관특성 대장균 K99(F5)의 심모항원에 대한 특이항체의 생산 | NRF 한국연구재단 |
| 2002 ~ 2003 | 살모넬라증에 대한 항체의 응용기술 개발 | 중소기업청 |
| 2004 ~ 2006 | 효율적 항체생산을 위한 면역증강제(Adjuvant)의 개발 | 중소기업청 |
| 2004 ~ 2007 |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항체의 응용기술 개발 | 중소기업청 |
| 2004 ~ 2008 | 항체를 이용한 애완견의 바이러스성 설사제 병과 치료제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 2005.7 ~ 2006.4 | 난황으로부터 항체단백질의 효율적 대량분리기술 개발 | 중소기업청 |
| 2007.3 ~ 2009.9 | 송아지설사병 예방 및 치료용 난황항체 개발 | 농림수산부 |
| 2011.6 ~ 2013.5 | 가금류의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오바이러스 제어용 신소재 개발 | 중소기업청 |
| 2011.11 ~ 2012.9 | 송아지 바이러스성 설사예방 및 치료용 신소재 개발에 관한 기술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 2015.10 ~ 2016.10 | 마이크로캡슐화된 난황항체(IgY)를 함유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농림수산식품부 |
| 2015.11 ~ 2016.10 | 해수유래 Probiotics를 이용한 하우스 새우양식기술 및 제품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주)단바이오텍
부생명과학연구소
Tel. 041-556-0852

면역항체 생산과정



람과 가축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한 특이 난항항체 개발연구를 시작했다. 부설 생명과학연구소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시설로 난항항체 연구에 매진하여 난항항체 개발과 생산에 있어 원천기술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로 단바이오텍은 국내 최초로 식품용 난항항체를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농업기술진흥청 지원과제인 송아지 설사병예방 난항항체 개발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난항항체를 사용한 송아지 설사예방 제품을 출시했다.

박종배 단바이오텍 대표는 “연구개발이 기술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여 매출의 약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단바이오텍은 고도의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병원체에서 고면역성 항원을 분리 생산하고 이에 대한 특이적 면역항체를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난황항체 효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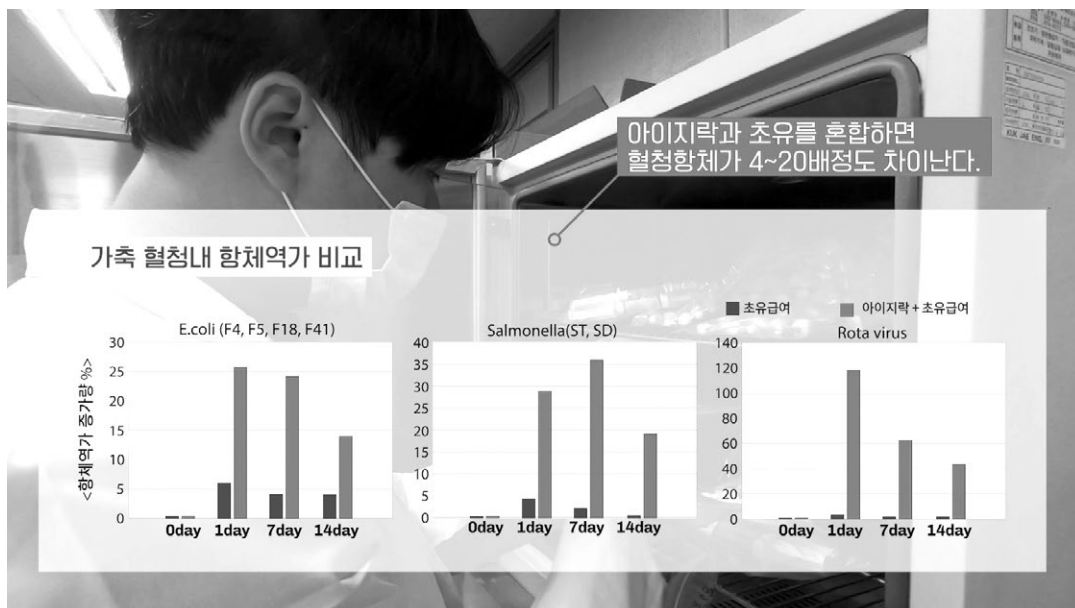
면역력 약한 송아지 설사에 특효 설사유발균 증식 억제, 예방 효과

모든 가축들은 몸안으로 들어오는 각종 병원성 물질이나 성분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몸에 들어와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외부인자를 항원이라 하고 이를 막아내려는 방어반응을 면역 또는 면역반응이라 부른다.

항체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균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병원균을 무력화시키는 면역물질이다.

단바이오텍의 난황항체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균에서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항원 단백질을 대량생산한다. 생산된 항원 단백질을 산란계에 접종하면 산란계에서 생성된 항체는 계란 난황에 축적된다. 이렇게 생산된 난황항체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군에 사용하고 있다.

송아지 사육농가에서 초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여러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함유된 난황



분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난황항체는 혈액에서 얻어지는 항체보다 생산성, 위생성, 편리성, 경제성등 다양한 면에서 장점이 많다.

면역체계가 발달되지 않은 갓 태어난 송아지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설사유발균에 쉽게 감염되어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시기에 난황항체를 급여하면 난황항체는 설사유발균에 특이적으로 부착하여 증식을 억제시키고 체외로 배설시켜 설사를 예방할 수 있다.

구강을 통해 섭취된 난황항체는 장으로 전달 되어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송아지의 경우 출생 후 24시간 후에는 장 구멍이 닫혀 흡수가 안되므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급여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 투여가 가장 효과적이다.

국내외 사양시험에서 난황항체 함유제품의 설사예방, 면역증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제품사양 실험결과 난황항체를 급여한 송아지는 초유만 급여한 송아지 보다 혈청 내 병원균에 대한 항체가 월등히 높았으며, 초유만 급여한 송아지 보다 설사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농가가 말하는 아이지락 효과

“송아지 회복에 탁월, 써 본 농가만의 특권”

실제 경주 복합영농에서 한우 일괄사육 농장주는 “송아지 폐사를 경험한 후, 아이지락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 후 단 한 마리도 폐사가 없었다”라며 “중규모 농가에서 폐사확률을 줄이려 한다면, 아이지락 제품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여에 있는 한우사육 농장주도 단바이오텍의 아이지락에 대해 “아이지락은 적당한 용량과 효과를 갖추고 있어 갓 태어난 송아지가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번식우 농가에서 사용하기 알맞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단바이오텍 제품은 해외사양에서도 효과가 증명되었다. 단바이오텍 아이지락 제품을 수입하여 터키에 공급하고 있는 ERKOC사는 터키 아피온코카테페대학에 아이지락 효능시험을 의뢰하여 아이지락의 효능을 확인하였다.

초유급여 전 단바이오텍 아이지락 10g을 먹이고 1년간 소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였다. 아이지락을 먹이지 않은 송아지는 50%가 설사를 한데 비해 아이지락을 급여한 송아지는 28.6%만이 설사증세를 보여 단바이오텍의 제품이 실제 설사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지락 급여시 설사발병율과 호흡기 질환율이 감소하여 송아지에 사용된 약품비가 연간 약 50%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아이지락의 효능을 확인한 터키에서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도 아이지락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바이오텍 박종배 대표는 “한우 사육농장에서 송아지 폐사율은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다. 단바이오텍의 아이지락은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균과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항체를 가지고 있어 아이지락 제품 사용이 설사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큰 도움을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바이오텍 아이지락 신제품 출시 송아지 설사예방, 면역력 강화 설사 발생하더라도 빠른 개선 효과

박종배 대표

국내 한우농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송아지의 질병과 폐사율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린 송아지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송아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면역력 형성에 중요한 출생 직후에 면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초유의 양이 충분하지 않고, 초유의 품질을 알 수 없으며, 품질이 규격화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성분이 풍부한 고농도





아이지락 파워30

제품효과 및 용량·용법

- 송아지의 설사 예방
- 송아지의 면역력 강화
- 설사 발생시 조기 개선 효과

● 송아지 출생 직후 :

가급적 빨리 본제품 1통(30g)에 100~12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붓고 혼합한 뒤 주둥이 뒤편의 뚜껑을 열어서 급여

●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설사 발생 시 :

2~3일간 1통(30g)을 1일 1회 급여

아이지락 프리미엄

제품효과 및 용량·용법

- 송아지의 설사 예방
- 송아지의 면역력 강화
- 설사 발생시 조기 개선 효과

● 송아지 출생 직후 :

가급적 빨리 1통(130g)을 급여

●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설사 발생 시 :

2~3일간 1통(130g)을 1일 1회 급여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제품 30g

아이지락 알파 IG-LOCK ALPHA

설사예방 Prevention of calf diarrhea
면역력 증강 Increase of immunity

대용유
첨가제
Milk Replacer
Additives

초유분말함유



기술개발 및 판매원



(주)단바이오텍 <http://www.danbio.com>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135
TEL : 041-556-0852 FAX : 041-556-0840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MOU 협약 체결

소 / 송아지용
30g

초유와 설사원인균에 특화된 난황항체를 출생 직 후 함께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요구에 발맞춰 최근에는 면역성분이 풍부한 초유분말에 설사원인균에 특화된 난황항체를 보강하여 면역증강과 설사예방효과를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아이지락 파워30과 아이지락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지락 파워30과 아이지락 프리미엄은 송아지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어 초유 섭취가 부족한 송아지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아이지락 프리미엄은 고농도 초유성분과 난황항체가 함유된 액상살균제품으로 축산농가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바이오텍은 유통을 간소화하여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아이지락 알파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이지락 알파는 대용유 첨가제로 대용유에 부족한 면역항체를 보강해 주어 송아지 면역력 증진과 설사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단바이오텍은 난황항체 생산에 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 품질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또한 난황항체 생산업체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없는 블루오션시장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바이오텍 박종배 대표는 “앞으로도 단바이오텍은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병원성 미생물과 독소 등에 대한 자연 친화적 항체 소재를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인류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사양·
컨설팅
01

환경관리 개선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엠디컨설팅

이번 호에는 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강릉의 H농장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강원도 강릉 H농장의 경우 지난 2019년 초부터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H농장은 2세 경영농장으로 현재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노하우와 열정을 나누어 가며 한우산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H농장의 특이한 점은 가업을 잇는 농장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분업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H농장은 아들이 번식우를, 아버지는 거세와 암소비육을 담당하는 2사이트(SITE) 농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H농장은 강원도 지역 대부분의 농장이 그렇듯 산 중턱에 위치한 탓에 우사의 한쪽 면이 막혀 고질적인 환기불량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는 섭취량 저하였으며, 둘째는 소들이 항상 불안정하고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몇 년째 비육성적 중에서도 특히 ‘출하체중’과 ‘등심단면적’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농장환경 진단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H농장은 총사육두수 300두 중 90두의 번식우로 매해 송아지를 자가생산하여 거세우 40두 내외 및 암소 70~80두 가량을 출하하는 일관사육 농장이다. H농장의 컨설팅 전인 2018년 농장 성적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컨설팅 전(2018년) 농장 성적

| 번식우 성적 | | | | 암소비육 성적 | | | |
|--------|--------|------------|--------------|-------------|------|-------|-------|
| 번식률 | 번식간격 | 송아지 폐사율 | 송아지당 수정횟수 | 1*이상 출현률 | 출하월령 | 출하체중 | 등심면적 |
| 90% | 13.3개월 | 3.3% | 2.0회 | 71.2% | 47개월 | 642kg | 87.1㎢ |

H농장의 컨설팅 실행 전 성적은 번식부분의 경우 모든 지표가 전국의 컨설팅 참여 농가 평균수준이며, 암소비육 성적의 경우는 1세부터 상당히 오랜기간 암소비육 사업을 하여 왔으나 체중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농장의 성적을 파악하고 현장점검 결과 이는 사육기간 전반에 걸친 섭취량 저하가 주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계획을 <표2>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2〉 농장 문제점 도출 및 컨설팅 실행계획

| 컨설팅분야 | 문제점 | 목표 | 컨설팅 계획 |
|---------------|-----------------------------------|---|--|
| 번식관리 | 수태율 저하 번식우 BCS편차 분만전후 관리부재 | 수태율 향상 적정 BCS유지 분만전후 관리프로그램 정립 | 분만전후 사양관리 개선방안 제시, 번식우 BCS관리교육,수태율 향상 방안교육 |
| 비육관리 | 등심면적이 적음 출하체중 미흡 | 출하체중 증가 등급출현율 개선 | 비육단계별 중점관리사항 교육 |
| 질병관리 | 송아지 호흡기 및 설사 관리 미흡 번식질병관리미흡 | 번식질병 예방 송아지 설사 개선 | 번식관련 질병 교육 송아지설사예방 집중교육 (약품 사용 방법, 관리방법 등) |
| 축사시설· 환경관리 | 환기불량 사조관리불량 | 쾌적한 환경유지 축사바닥, 수조, 환기등 적정관리 | 과학장비 활용 환경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 제시 축사환경 청결유지 교육 |
| 경영관리 | 경영관리 미흡 | 데이터 관리 실현 및 사업계획 구축 |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사업 계획 구축방법 교육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 |

H농장은 우사의 위치 문제로 인해 우사 내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래 우사 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만 우사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 암모니아(NH₃) 등이 서성이지 않게 된다. 편안한 우사 상태야말로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악지방에 위치한 우사는 절개지에 위치할 경우 우사의 1면이상이 막혀있는 형국일 수밖에 없으며, 막혀있는 면의 일정거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공기의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H농장 번식우사의 경우 우사의 높이는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었으나, 우사의 2개면이 절개지로 막혀있어 공기가 유입되는 입기구 측의 암모니아 가스 농도는 5.0ppm 수준인 반면, 배기구 및 공기가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10.6ppm 이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포그머신을 통하여 공기의 흐름을 확인하고 정체구간을 인지 할 수 있었다. 바닥의 건조를 목적으로 환풍기를 설치할 경우 바람의 방향이 바닥을 향하면서 사료조 턱에 부딪혀 사료조 근처에서 상승기류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우사지붕을 통해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대체로 배기구의 면적이 부족하여 지붕을 타고 와류현상을 일으키게 되며, 외부로부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사내 공기만 돌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절개지와 우사의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으면 외부로 배출된 가스가 다시 우사 내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농장의 공기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안점은 우사내 정체된 공기를 외부로 강제로라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는 우사열 원치를 닫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바닥을 말리기 위한 팬만 운영할 경우 우사내 환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절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우사 중앙 상층부 강제 팬 설치를 권장하였다.

우사 내 환경관리 중 환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사실 답은 간단하다. 가스발생량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바닥관리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잘 말려줌으로써 가스발생량을 줄인다면 가스발생으로 인한 섭취량 저하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히 섭취량 증가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한 등 심단면적 증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H농장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였다.

〈자료1〉 컨설팅 전후 암모니아 상황



〈자료2〉 컨설팅 전후 환기 변경사항



암소비육 출하성적 개선

환기개선과 바닥관리개선을 통하여 섭취량을 개선한 결과 암소비육우의 출하성적이 1⁺ 이상 등급 출현률이 8.6% 향상되었고, 두당평균 출하체중도 43kg 증가 되는 등 <표3>와 같이 향상되었다.

〈표3〉 암소비육우 컨설팅 전후 주요 경제형질 성적 비교

| 항목 | 컨설팅전 (2018년) | 컨설팅후 (2019년) | 평균변화 |
|-----------|-----------------|-----------------|---------|
| 1+이상 출현률 | 16.4% | 25.0% | 8.6% 증가 |
| 1등급이상 출현률 | 71.2% | 69.8% | 1.4% 감소 |
| 평균 출하체중 | 642kg | 685kg | 43kg 증가 |
| 등심단면적 | 87.1㎢ | 91.9㎢ | 4.8㎢ 증가 |
| C등급 출현율 | 21.9% | 21.1% | 0.8% 감소 |

H농장의 암소비육 성적변화는 무엇보다도 출하체중의 증가가 놀랍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의 성적 또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환기구조를 조금 고쳤을 뿐인 이 간단한 변화가 소를 일년 내내 편안하게 만든 것이다. H농장은 앞으로 더 높은 단계의 목표를 향해 뻗어 나갈 것이다.



사양·
컨설팅
02

한우사육 100문100답

국립축산과학원

Q. 조사료와 농후사료 적정 급여비율은?

소는 되새김을 하는 반추가축으로서 정상적인 되새김을 위해서는 풀과 같은 조사료를 일정한 량 급여해야 한다. 되새김을 통하여 침에 들어 있는 중조(탄산수소나트륨, NaHCO_3)가 충분히 공급됨으로서 반추위 내 산도를 중성으로 유지하여 사료를 소화시키는 반추위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추가축의 소화관 내에서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섬유질을 공급해야 하는데,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적정 급여비율은 육성기에는 양질의 조사료를 사료급여량의 50%정도를 급여하는 것이 적당하고, 비육전기에는 30%, 비육후기에는 볏짚 위주로 10%미만 정도를 급여하는 것이 적당하다.

호밀 담근먹이를 조사료원으로 비육 중인 큰 소의 경우에는 배합사료를 무제한으로 급여하는 것보다는 체중의 2%정도로 급여하는 것이 증체와 사료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조사료를 이용하여 비육할 때는 배합사료 정량을 급여하는 것이 좋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Q. 좋은 밑소를 고르는 방법은?

가. 건강하고 식욕이 좋은 소

- ① 콧등에 물방울이 맺혀 있고 분변이 정상이며 배뇨 시 이상 자세를 갖지 않는 소
- ② 피모는 윤기가 있고 눈은 활력이 있으며, 눈꼽이 없는 소
- ③ 얼굴이 짧아 보이면서 눈 언저리가 선명한 소
- ④ 콧등이 짧고 입턱이 넓으면서 크게 보이는 소
- ⑤ 복부가 적당히 넓고 크면서 늘어지지 않는 소

나. 체형이 좋고 육 생산이 많은 소

- ① 체형이 충실하고 균형이 잡혀있는 소
- ② 체고가 크고 대퇴부 두께가 충분한 소
- ③ 머리가 커 보이지 않고 흉수가 크게 늘어지지 않은 소
- ④ 다리가 가늘면서 견고하고 발굽의 변형이 없으며 밖으로 벌려진 소
- ⑤ 꼬리와 뿔이 평골이면서 가늘고 피부에 주름이 잡혀 탄력이 있는 소
- ⑥ 늑골과 늑골사이가 넓고 등은 평평하고 넓으면서 긴 소
- ⑦ 요각 폭이 넓고 십자부가 평평하게 발달된 소
- ⑧ 소가 길고 넓으며 경사가 지지 않으면서 곤폭과 좌골폭이 넓은 소

다. 좋은 육질을 생산할 소

- ① 귀 안의 털이 부드럽고 귀가 작으며 얇어 보이는 것
- ② 어깨가 어느 정도 넓어 보이는 것
- ③ 털은 가늘면서 부드럽고 밀생한 것
- ④ 뿔은 둥글고 가늘면서 매끈하게 보이는 것
- ⑤ 곤폭이 좁고 경사가 저 있고 전관위(발목)가 가는 소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Q. 어떻게 하면 발정난 소를 쉽게 찾아 낼 수 있는가?

발정난 소를 잘 찾아내려면 발정 징후를 잘 알아야 한다. 소는 약 60%가 아침에 발정이 오고, 40%가 오후에 발정이 온다. 특히 새벽 0시~6시 사이에 40%가 발정이 오므로 아침 6시까지의 발정 관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정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시판하는 발정검출기(kamar, 카마르)를 엉덩이뼈와 꼬리뼈 사이에 부착한다. 발정검출기를 부착한 소가 발정이 와서 다른 소가 올라타면 이 발정검출기가 올라탄 소의 가슴에 눌리게 되며 누르는 압력에 의하여 발정검출기 안에 들어 있는 붉은 염색액이 누출되어 전체가 붉게 보인다.

염색액이 누출되려면 2~3번의 승가와 충분한 압력이 있어야 한다. 발정검출기의 부착 부위는 발정이 오는 소의 크기와 승가하는 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들이 클수록 발정검출기는 꼬리 시작부위에 붙인다. 많은 승가로 발정검출기가 떨어져 없는 것은 발정이 왔다는 표시이다.

발정검출용 크레용이나 일반 시판 페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가 시작되는 부위에 길이 20cm, 폭 3~5cm 정도 두껍게 칠한다. 꼬리에 페인트를 칠한 소가 발정이 와서 다른 소들이 여러 번 올라타면 페인트가 지워져 발정이 온 것을 알게 된다.

발정관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접목한 한우 번식우 생체정보 수집 센서를 활용한 발정·출산·질병 등을 원격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한우 사육농가에도 보급중이며 ICT 기술의 농가보급 확대를 위해 자동화 장치 국산화와 고도화 연구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번식우 발정관찰 확인 비율은 9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033-330-0625)

※ 출처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개선의 날 농가 자가점검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 운영됩니다.

축산농장은 매주 수요일에 농장 및 주변 소독, 가축사육공간과

퇴비사 내부 미생물제제 살포, 구서·구충 방제활동, 환경정비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자체(시·군·구)에서 축산농가의 자가방역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은 구충지원,

매주 수요일 환경개선의 날에는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가 이행여부 및 법령위반 사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농가에서 자가점검표에 따라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검요령 및 농가 자가진단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장 소독·방역·악취 관리 요령

| 구분 | 축사 외부 | 축사 내부 | 가축분뇨처리시설 |
|----|---|-------|--|
| 방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차단) 축사 경계선(외부)에 울타리 설치 및 쓰레기더미, 수풀 등 제거 * (돼지) 높이 1.5m 이상, 윗부분에 뾰족한 철조망 설치(20cm x 20cm 구멍의 철망을 1m 간격으로 이중망 설치 권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 깔짚 보관창고,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cm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설서제 살포시 가축의 허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라·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랩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생석회 등 살포(6kg/m²) * 살충제는 가축의 허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석회) 농장입구 진입로 약 6.6m²(2평)* 면적에 생석회를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3.3m²(1평)에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더미에 생석회 활용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m²당 가축분뇨 15cm 적재시 마다 생석회 등 0.6cm(6kg) 내외 살포(7.5kg 이내) ② 생석회 살포하고 1~7일 후 미생물제제를 살포하고 교반 작업 * 발열 및 알칼리 성분으로 바이러스 등 사멸, 구충, 부숙 촉진 및 비료 효과 증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실-가금) 축사 입구 전실 설치, 축사 동별 및 퇴비사 이동시 전용의복과 장화를 갈아신고 손씻기 등을 철저 | | |

• (사체) 폐사체·유산축·태반 등은 격리시설에 보관(냉장보관 또는 소독제, 생석회 등 도포) 또는 신속 위탁처리 * 퇴비장에 투입금지

• (개, 고양이 등) 지정된 장소에 가두어 시육하거나, 묶어서 사육(농장내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

| 구분 | 축사 외부 | 축사 내부 | 가축분뇨처리시설 |
|-------|---|---|---|
| 소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 축사 외부, 사료보관 창고 내외부, 출하대, 축사 내부의 관리자 이동통로, 착유실 등 소독(주 1회 이상) 및 기록 * 가축 사육공간, 퇴비사 퇴비더미에 소독제 살포 금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조)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 세척 후 소독약 교환·보충 * 발판소독조 옆에 세척소독조를 두어 장화 등을 먼저 세척후 소독조에 서 소독 * 차량소독조는 차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고 주 2~3회 소독약 교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사료급이조 및 급이 라인, 급수조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즐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 |
| 환경·악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분뇨처리시설 외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 기자재 정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벽면·천장의 거미줄, 관리자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틀), 컨베이어 벨트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 관리)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및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이내, 퇴비사 2m 이내) - 분뇨가 한우 젖소 등은 유출 방지턱, 돈사 피트(pit) 등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짚 및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갈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갈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갈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과 퇴비더미에 주 1회 이상 미생물제제 살포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m²(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반관리) 축사바닥 갈짚 및 퇴비사 퇴비더미를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주 1회 이상 교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시설(부숙)로 이송 * 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m³, 24시간 공급(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
| 기록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비치, 1년간 보관{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지 제6호 서식]}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 기록부 기록·비치, 1년간 보관{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52호 서식]}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권리대상 기록 비치,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제22호 서식]} - (퇴액비) 허가규모 6개월, 신고규모는 12개월마다 부숙도 검사, 육안판별법 및 부숙도 검사 후 기준 적합한 퇴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 * (퇴비) 배출시설 1,500m²미만은 부숙 중기, 1,500m²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액비) 부숙 | | |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농가 자가점검표

| 구분 | 점 검 내 용 | 관리상태 | |
|----------|---|------|---|
| | | ○ | × |
| 축사 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차단) 축사 경계선(외부)에 울타리 설치,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 기자재 정리 등 * (돼지) 높이 1.5m 이상, 뒷부분에 뾰족한 철조망 설치(20cm x 20cm 구멍의 철망을 1m 간격으로 이중망 설치 권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 및 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등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사료 및 깔짚 보관창고, 등 틈새 메우기, 쥐덫(미끼통)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cm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설서제 살포시 가축의 허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라-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생석회 등 살포(6kg/m²) * 살충제는 가축의 허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입구 진입로 약 6.6m(2평)* 면적에 생석회를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3.3m(1평)에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실-가금) 축사 입구 전실 설치, 축사 동별 및 퇴비사 이동시 전용의복과 장화를 갈아신고 손씻기 등을 철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조)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 세척 후 소독약 교환·보충 * 발판소독조 옆에 세척소독조를 두어 장화 등을 먼저 세척후 소독조에서 소독 * 차량소독조는 차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고 주 2~3회 소독약 교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체) 폐사체·유산축·태반 등은 격리시설에 보관(냉장보관 또는 소독제, 생석회 등 도포) 또는 신속 위탁처리 * 퇴비장에 투입금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고양이 등) 지정된 장소에 가두어 사육하거나, 묶어서 사육(농장내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축사 외부, 사료보관 창고 내외부, 출하대, 축사 내부의 관리자 이동통로, 착유실 등 소독(주 1회 이상) 및 기록 * 가축 사육공간, 퇴비사 퇴비더에 소독제 살포 금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 관리) 축사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 | |

● 농 장 명 :

● 축종 및 사육규모 : , 두

● 주 소 :

● 관 리 일 : 년 월 일

| 구분 | 점 검 내 용 | 관리상태 | |
|-----------|---|------|---|
| | | ○ | × |
| 축사 내부 | • (소독)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 급수조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 |
| |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출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 |
| | • (청소) 벽면·천장의 거미줄, 관리자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틀), 컨베이어벨트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 |
| | • (분뇨 관리)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이내), - 분뇨가 한우 젖소 등은 유출 방지턱, 돈사 피트(pit) 등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 |
| | • (깔짚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 15cm 80일 이용 가능) *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 |
| |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깔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에 주 1회 이상 미생물제제 살포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m(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 | |
| | • (교반관리)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주 1회 이상 교반 | | |
| 가축분뇨 처리시설 | • (설치류, 조류 유입방지)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쥐덫(미끼통) 설치, 허수아비(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 망 및 건물 입구 망충망 등 설치 | | |
| |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 |
| | • (퇴비사 등) 유출방지턱 설치(퇴비사 2m 이내) | | |
| | •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 |
| | • (미생물제제) 퇴비더미에 주 1회 이상 미생물제제 살포 | | |
| | • (교반관리) 퇴비더미를 트랙터, 스kid로더 등으로 주 1회 이상 교반 | | |
| |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로 이송(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m ³ , 24시간 공급. 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 | |
| 기록 의무 | •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비치, 1년간 보관(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지 제6호 서식]) | | |
| |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 기록부 기록·비치, 1년간 보관(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52호 서식]) | | |
| |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 비치,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제22호 서식]) - (퇴액비) 허가규모 6개월, 신고규모는 12개월마다 부숙도 검사, 육안판별법 및 부숙도 검사 후 기준 적합 퇴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 * (퇴비) 배출시설 1,500m ² 미만은 부숙 중기, 1,500m ²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액비) 부숙 | | |

사양·
컨설팅
03

중국, 대만에서 렘피스킨병 발생, 우리나라 발생 위험도 커져!

질병 매개 곤충 활동기인 하절기가 위험한 시기



나진주 _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수의연구관

지난 7월 8일, 중국 본토 샤먼시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만 금문섬(Kinmen county)에서 사육 중이던 소 543마리 중 23마리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피부 전체를 뒤덮는 수많은 조그만 혹덩어리(결절)가 확인되었고 이 중 한 마리가 폐사했다.

해당 의심 건의 대만 국립동물위생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림프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으로 밝혀졌고, 이 사실을 7월 1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15일, 중국 농림수산부에서도 대만 금문섬과 가까운 중국 남동부지역 푸젠성, 절강성 등 6개 지역에서 6월5일부터 7월 12일까지 6건의 림프스킨병이 발생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가까운 중국 남동부와 대만에서 발생한 림프스킨병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림프스킨병에서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알람을 울리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해외악성전염병인 림프스킨병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유입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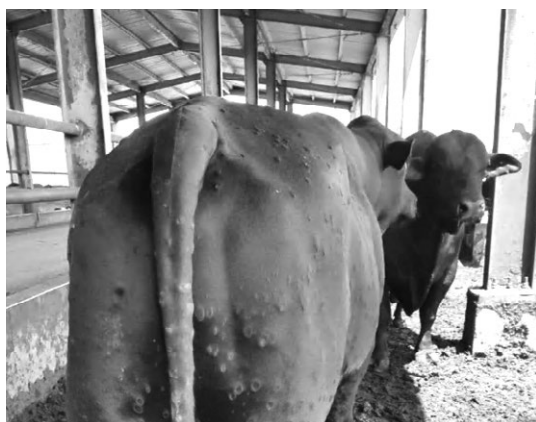
림프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견된 이래로 상당 기간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1989년 아프리카를 최초 벗어나 이스라엘에서 발생을 시작으로 중동 전역으로 확산(2012)된 이후 터키(2013)를 통해 발칸 반도에 위치한 동유럽(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2014)까지 퍼져 나갔다.

또한 러시아(2014), 인도, 방글라데시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접경지역인 중국 신장지구에서도 2019년 9월에 보고되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올해 7월, 중국 남동부지역 및 인접 대만에서도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국내 유입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질병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림프(Lumpy; 혹덩어리) 스킨(Skin; 피부)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감염된 동물의 피부에 수많은 울퉁불퉁한 혹덩어리(2~5cm크기)가 생긴다는 점이다. 소와 물소(water buffalo)에 감염되나 사람에는 감염되지 않는 비(非)인수 공통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과 함께 눈과 코에 분비물이 많아지며, 피부와 내부 점막 등에 수많은 작은 혹덩어리(결절)가 생기고,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 등이 관찰된다.

피부에 생긴 결절은 점차 괴사, 궤양화 되고 이후 2차감염(세균, 파리 구더기)되며 영구적인 흉터로 남게 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은 감염된 동물의 약 40~50%에서 관찰되며, 어린 송아지와 착유 중인 소에서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5%로 드물게 발생한다.

[참고사진 1] 소에서 림피스킨병의 증상



대만 금문섬에서 림피스킨병 발생사진
(대만 농업위원회(COA) 제공 사진)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제공 림피스킨병 사진
출처 : <https://www.pirbright.ac.uk>

[참고사진 2] 중국과 대만의 림피스킨병 발생 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해당 질병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심각한 유량 감소, 수소 불임(일시 또는 영구적), 소가죽 손실 등 큰 경제적 피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OIE에서도 관리대상(LIST) 질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럼피스킨병 발생국의 살아있는 소 및 소 유래 축산물은 국제적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또한 아프리카를 벗어나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질병(Emerging Disease)이자 국경초월질병(Transboundary Disease)으로 국가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질병의 원인체는 폭스바이러스과(Poxviridae), 카프리포스바이러스(Capripoxvirus)로 분류되는 럼피스킨병 바이러스(LSDV)이다. 질병 전파는 주로 흡혈파리류(침파리; *Stomoxys calcitrans* 등), 모기류(*Culex*종, *Aedes*종 등), 진드기류(*Ixodid*종 등) 등의 흡혈 곤충에 의해 이루어진다.

발생지역마다 질병을 옮기는 곤충의 분포가 다르며, 국내에도 다양한 종의 흡혈파리 및 모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유입된 이후 이들에 의한 질병 전파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주로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다 보니 곤충 서식 및 생장에 유리한 기후 조건인 따뜻한 시기에 발생이 집중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LSDV 감염 소에 사용했던 주사기를 다른 소에 다시 사용할 경우에도 전파된다. 감염된 동물의 피부 결절병변, 침, 눈·코분비물 등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매개물(사료, 음수)을 통한 간접 전파의 가능성도 보고된다.

OIE에서는 럼피스킨병 청정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예방조치로 살아있는 소(물소 포함) 및 축산물의 수입제한 조치와 감염 국가, 지역(Zone)로부터 약 20km 범위 내에 위치한 전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권장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동유럽국가와 서아시아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첫 발생건(Index case)을 조기에 검출한 후 살처분과 함께 신속한 백신접종 정책을 수행할 경우 질병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럼피스킨병 방역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동유

럽국가 중 발생 및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2019년 약 180만두)하였고, 의심증상 신고를 통해 감염동물을 색출하는 수동적인 예찰과 함께 곤충 활동기(4월부터 10월)에 능동적인 임상 예찰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6년 7,483건에서 2017년 385건으로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2018년 이후로 발생 건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EU는 발생 및 위험지역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백신접종과 정기적 임상예찰이 렘피스킨병을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만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발생농가 살처분, 금문섬 소재 소 사육농가 대상 임상증상 예찰, 매개 곤충 분포 조사·관리, 금문섬에서 대만본토로의 생우 및 쇠고기 이동 금지, 금문섬-대만본토 이동수단(비행기 및 선박 등) 소독 강화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문섬에 사육 중인 전두수 소를 대상으로 조만간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렘피스킨병에 대한 전세계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의심축 발생을 대비하여 정밀진단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서 렘피스킨병을 경험한 EU 등 여러 국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참고하여 국내 방역 대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만에 하나 국내에 유입·발생한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소 사육 농가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질병 전파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유입 위험도가 높아진 지금, 농가에서는 수시로 전체 사육 소의 이상 증상을 살펴보고, 곤충 활동시기에 농가 차단방역을 준수하고 위생 수준(청소 및 소독)을 더욱 높여 청결한 농장 환경을 조성하며, 사육 농장 안 및 주변에 서식하는 흡혈곤충 수를 줄이고, 접종용 주사기를 여러 다른 동물에 재 사용하지 않는 등을 실천 함으로서 발생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렘피스킨병의 특징인 고열과 함께 눈과 코에 분비물이 많아지고 수많은 2~5cm 크기의 피부결절이 확인되는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협회 소식

NEWS



중양회

중양회
01

본회, 수해피해 지원 등 회장단 논의 농식품부, 수해 농가에 긴급방역비용 지원

우리 협회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 피해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양회에서는 피해지역의 상황을 접수하여 피해현황을 집계중이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무에 따른 지원책을 안내중이다.

정부도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축방역물품(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등),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전남 등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연재해 관련 보장범위

| 구분 | |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 보장내용 |
|----|-----|--|--|
| 소 | 한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재·수재·설해,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소 도난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60%, 70%, 80% 보상 중 선택 |
| | 종모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
| 축사 | 특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50만원 차감 후 보상 |

-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상기준

| | | |
|--------|--|---|
| 보상내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60~80% 보상 | 재해발생시 |
| 보상신청 | 지역축협 및 손해보험사로 접수 | ▼ |
| 지급절차 | 서류접수 이후 7일 이내 지급 <표> |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
| 손해액 | (중량X지육가격)X75% *지육가격:축평원 고시 사고일 기준 전국평균가 | ▼ |
| 보험가액 | 폐사시점 월령(1개월 이하는 1개월로 간주) - 6개월 이하: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가격 (2개월령 미만은 50%) - 7개월 이상: 체중kg당 금액 - 수컷 25개월령 초과: 655kg로 인정 - 암소 40개월령 초과: 470kg로 인정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 (피해목적물 수량, 피해면적 등 산정) |
| 보험지급금액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보험가액 한도 손해액 전액) | ▼ |
| 자부담 | 지자체 및 특약에 따라 10~30% ex) 경기도: 축발기금 50%+도비 9%, 시군비 21%(차등보조)+ 자부담 20%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
| | | ▼ |
| | | 보험금 지급 |

- 재해 보험 미가입시 보상기준

각 지자체로 재난복구비용 지원 신청(가축재해보험과 중복신청 불가)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표>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한우부문만 발체>

| 품목별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고 |
|-------------|---------------|----------------|-----------|---|
| (1) 축사파손·유실 | 우사-한육우사 | m ² | 121,000 | <부담율> 지원 35% / 용자 55% / 자부담 10% |
| (2) 축산분뇨시설 | 분뇨처리시설-한육우 | m ² | 78,500 | |
| (3) 초지유실·매물 | 초지복구(경운초지) | m ² | 573 | <부담율> 용자 70% / 자부담 30% |
| | 초지복구(불경운초지) | m ² | 401 | |
| | 초지복구(임간포지) | m ² | 301 | |
| (6) 가축입식 | 한우-송아지(3~4개월) | 마리 | 1,400,500 | <부담율> 지원 50% / 용자 30% / 자부담 20% ※ 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 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 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
| | 한우-육성우 | | 1,560,000 | |

※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으로 생계자금 및 주택피해 추가 신청가능

- 특별재난지역선포 혜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유예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상하수도 및 전기료, 도시가스, 통신료 감면
- 농업 복구 용자: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농협·수협·산림조합)
- 주택자금용자: 3년거치 17년 상환 연리 1.5%(변동)
- 농기계 수리 무상지원

중앙회
02

한우협회 미경산 한우 출하 안내

지난해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소가 직거래유통망과 연계해 출하된다.

전국한우협회
美미경산한우

선제적 수급조절에 동참하기 위해 약정된 약8,700여두의 미경산우에 대해 유통 및 출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 직거래유통망을 활용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경산우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중앙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02-525-1053 내선 207)

<미경산우 출하정산 조건>

1. 기준가격: 김해공판장 4일(화~금) 평균가격
- 도축일 포함 전 7일 중 4일 평균가(월, 토요일 제외)
2. 출하장려금
- 1⁺⁺등급·1⁺등급: 김해공판장 4일평균가격 + 1,000원
- 1등급: 김해공판장 4일평균가격 + 500원
※ 단, 출하규격(300kg이상 480kg이하)에 속하는 개체에 한하여 지급
3. 부산물 가격: 음성공판장 암소 평균가격 적용
※ 단, 우피는 당해 도축장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4. 도축장: 한축산업(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1204-15)
5. 도축비: 176,000원/두(정산시 공제)
6. 출하수수료: 0.3%
7. 하자육 처리적립금: 0.1%(하자육 발생시 공제처리하지 않음)
※ 하자육은 kg당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감하지 않고, 하자육 처리적립금으로 처리
※ 단, 그 이상 발생하는 금액은 출하자 부담

중앙회
03

축산농가 '통합진단표' 도입 움직임에 촉각 본회, 규제책 활용가능성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8~9월 중 축산농가가 스스로 자신의 농장을 진단하는 '축산농가 통합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단체 회장단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을 통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자가진단표에는 축산농가들의 의무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함께 표기될 전망이다.

예컨대 한육우의 경우 ▲축산업영업 ▲사육시설 ▲소독설비 ▲방역시설 ▲농가준수사항 ▲이력 및 위생관리 ▲악취관련 등 7개 범주에서 30여개의 자가진단항목이 제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명하는 통합진단표는 “축산농가들이 다양한 법률 규정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농가들이 자신의 농장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농가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규정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그 활용범위는 스스로 점검해보고 몰랐던 규정 및 처벌 등에 대해 인지하게 돕는 수준이어야 한다”면서도 “지자체나 농식품부가 진단표를 가지고 농가를 단속하거나 각종 보조사업 및 지원에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요회
04

무항생제 인증제 개정 의견 제출

축산물의 인증제와 관련,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인증제를 간소화하여 농가 불편해소와 소비자가 인증제로 인한 오해와 혼란의 문제를 방지 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협회는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의 단계적 폐지 검토와 우선적으로 무항생제 인증제의 명칭 변경을 적극 건의했다.

축단협 차원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양한 인증제의 통폐합으로 단일화된 인증제 마련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일부에서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함에 따른 전체 한우에 대한 오해와 불신방지를 위해 명칭변경을 요구했다.

중요회
0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의 검토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도입 내용과 관련, 우리 협회는 도태명령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가전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비구조단백질(NSP)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어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다른 농가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결정된 가축을 ‘도태권고’ 대상에서 ‘도태명령’ 대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협회는 ‘도태명령’은 농가 보유 소를 강제로 출하토록 하여, 사유재산인 소를 자유의지로 처분할 권리를 침해하며 사유재산인 소를 강제 처분함으로써 헌법이 정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개정령(안)의 ‘도태명령’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부득이 ‘도태명령’을 도입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명령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과 일시 사육중단으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회
06

수의사 처방제 개정 의견제출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원격진료, 전화진료 등을 통해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건의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중앙회
07

축산법 종모우 선발체제 개정 건의

본회는 지난 7월 8일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방문해 아르헨티나 현지 우육진흥원과의 화

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국은 축산 진흥 및 지원 정책과 환경, 인공육 등 세계 공통의 축산업 난제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르헨티나 우육진흥원은 현지 쇠고기 산업을 구성하는 농가, 유통, 수출, 수입, 홍보, 연구 등 모든 분야가 연합성격으로 모인 정부 기관이다.

특히, 대체육·인공육 이슈와 관련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르헨티나 측은 “인공육은 실제 육고기가 가지고 있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질 수 없는 ‘인공’육일 뿐, 이름 자체도 육류(meat, 肉)에 의지하며 인공육, 콩고기 등으로 대체를 시도중이지만 소고기의 장점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본회와 축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적·문화적 교류를 요청했다.

중앙회
08

협회사료, 최고스펙 제품 추진 및 도축 성적 분석 추진 협회 OEM 생산 사료 협의회, 대한한우사료 일원화 등 논의

우리 협회는 협회사료를 이용하는 도지회 및 시군지부 관계자들과 OEM 운영협의회를 통해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폭우가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사료가 변질되는 등 혹서기 및 장마철 등 습기로 인한 사료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한우사료의 통합논의도 이뤄졌다. 전체물량의 5%정도인 건강한우도 대한한우로 명칭을 통합할 계획이다. 추후 원재료비에 따라 사료회사와 조율해 하나의 명칭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 사료를 이용하는 1개지회, 10개지역 관계자(경북, 완주, 임실, 고창, 순창, 충주, 옥천, 홍성, 화천, 군위, 고흥)들은 사료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현재의 배합비와 스펙을 유지하되, 중앙회가 환율상황을 주시하고 변화에 따라 사료공장과 단가협의 및 컨설팅에 촉각을 곤두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환율 및 원재료 가격 등의 협의를 통해 최고스펙의 사료 출시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돼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

중앙회는 사료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사료사용실적과 도축성적 등을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한 분석과 실사용자의 한우마당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협회 사료를 홍보하고 이용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 09 여성청년분과위원회 추진 탄력

지난해 11월 출범한 우리 협회 여성청년분과위원회가 올 하반기 전국단위 교육을 구상 중이다. 출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활동의 제약이 커 조직화가 더뎠지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북도지회, 울산시지회, 강원도지회, 제주도지회 등이 조직을 구성했거나 8월내 구성할 계획이다.

| 기간 | 8~10월 | 10~12월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중앙회 임원회의(여성) - 3차 중앙회 임원회의(청년) - 강원도지회 여성·청년분과 임원회의 - 제주도지회 여성·청년분과 임원회의 | - 11월중 전국 교육 |

※ 지회·지부 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시 중앙회로 계획서 전달 요청

||||||| 지회·지부 |||||

지회·지부 01 강원도지회, ‘한우로 나누는 사랑의 한우곰탕’ 후원

전국한우협회강원도지회(지회장 박영철)는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센터장 홍기종)에 한우곰탕(2,620개/995만원 상당)을 기탁하여 금일 전달식을 강원도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했다.

전국한우협회강원도지회에서 기탁한 한우곰탕(2,620개)은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를 통해 강원도 영서지역 12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소외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평군지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완화요구

양평군이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가축사육 제한 개정안)에 대해 양평군지부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평군지부는 ▲일부제한구역 내 거리제한을 220m→150m로 축소 ▲주거밀집지역이나 전부제한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축사의 경우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허용 ▲신·증축이 제한되는 구역이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신·증축 허용 등 3가지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환경과 담당자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안을 조례심의위원회와 군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도 “축산업계와 일반주민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어느 한쪽의 요구만을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축사육 제한 개정안’은 다음 달 군 조례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다.

거창군지부, ‘애우’ 불고기 학교에 전달

전국한우협회 거창군지부(지부장 손정운)는 지난 8월 6일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현)에 청소년 한우 맛 체험 행사를 위해 한우 불고기 278kg(1천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지부장 최병철) 및 각 지역 농협에서 300만원, 거창축협(조합장 최창열) 및 나눔축산에서 300만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우협회에서 600만원을 후원했다.

손정운 거창군지부장은 “미래 꿈나무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거창 한우의 맛을 체험하는 동시에 몸에 좋은 한우를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한우인, 한우산업의 미래다

한우협회는 1999년 발족된 이후 20여 년간 현안 해결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도자들의 나이도 벌써 장년을 넘어섰다. 이들에게는 새 성장 동력이자 미래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2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청년분과 위원회의 발족과 관련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 시점이 청년 한우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미래를 내다보는 한우산업을 위해서는 후계 및 청년 한우인들의 추진력과 민첩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차질이 생겨 전국단위의 모임을 자제하고 지역 중심으로의 구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진 감이 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게 청년분과위의 계획이다. 청년분과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 한우협회 중앙회, 도지회에서 운영방침이나 임원을 선정하지 않고 청년 한우인 스스로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뜻에서다.

장성대 청년분과위원장은 “수직적,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다를바가 없다”면서 “청년다운 사고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에 사료선택·출하주도권 부여한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공판장의 출하예약제에 소외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가 직거래 유통망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이용하는 사료에 관계없이 한우 농가가 출하시기를 정해서 출하할 수 있고 상장수수료가 없으며 부산물 제값받기 등의 장점으로 매년 출하두수가 증가하며 농가 수익 제고에 기여를 해왔다.

직거래 유통망 운영의 의미는 단지 한우 농가들의 출하선택권 보장이라는데 그치지 않는다. 한우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적기출하’에 대한 숨통을 틔워줬고, 공판장이라는 거대 유통망의 견제 역할을 함은 물론 지역 도축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역할을 해왔다.

2019년 한 해 도축된 한우 중 공판장 비율은 56%에 달할 정도로 공판장 편중 현상은 심화 되고 있다.

공판장에 출하가 몰리면 지역 도축장 경영은 악화되고, 지역 출하 물량이 줄면 대량 구매를 원하는 부산물 유통인의 발길이 끊어져 결국 지역 도축장의 부산물은 제값을 못 받게 돼 공판장으로 출하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판장으로 이동하는 운송비와 경매 상장수수료는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판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더라도 운송비와 상장수수료를 고려한다면 농가 수익개선에는 오히려 협회 직거래 유통망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협회는 2019년 한 해 직거래 유통망을 통해 공판장으로 출하한 거세우 약 천 두의 정산 결과를 협회 직거래 유통망 이용 시 정산금액으로 변환해 보고 이를 분석해봤다. 그 결과 협회 직거래 유통망 이용 시 두당 평균 13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거래 유통망을 통한 출하실적은 2016년 2,200여 두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9년 한해 4천두 이상의 출하실적을 올리며 증가하고 있다.

한우농가에게 사료선택권과 출하 주도권을 주기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 이제는 많은 한우 농가가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신문 “시중유통 중인 부적격 한우사료 없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2020년 제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30여개 한우사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분석결과 등록성분 함량 미달사료는 적발되지 않았다.

금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전국한우협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TMF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분석된 사료들 중 함량을 위반한 사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전북일보

지역 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 주력, 축산 악취 대책도 찾을 것

“새로 출범한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은 지역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과 활성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7월 7일 출범한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에 박승술(64)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이 취임했다.



그는 축산업에 30여년에 종사하며 한우협회 정읍시지부장, 한우협회 전북지회장을 역임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축산업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면서 “축산에 관련한 장·단점은 행정과 조합(생산농가)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발전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은 한우협회 정읍시지부(4월 30일 총회 승인)와 한우육종협동조합(5월 10일 총회 승인)이 통합되어 7월 7일 합동총회에서 박승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출범했다.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530여 한우농가(8만여두)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박 이사장은 통합출범에 대해 “한우협회는 농가 생산이력제와 가축시장을 주업무로 했고, 조합은 한우식당운영·사료공동구매·유통을 전담하면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여 정지작업을 거쳐 통합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유행하는 말 중 하나는 ‘열정’이다. 땀가 없는 순수한 열정을 찬사하는 말들이 주를 이룬다. ‘열정 엄마’, ‘열정 파이터’ 등 열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성실을 넘어 자신을 불태우며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의 기시감이 들곤 한다.

축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조해인 전국한우협회 부장을 보면 ‘열정’이라는 말이 바로 떠오른다. 한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 일처럼 목소리를 내는 조 부장을 사람들은 열정 있다고 말한다.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했는데 막상 입학 후 하고보니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축산이란 분야가 알아갈수록 재미있어서 학창시절에는 전공에 대한 재미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건국대 축산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축산관련잡지기자로 4년간 활동한 조 부장은 농가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우협회에 입사한지 햇수로 10년이 넘어간다.

“한우협회에서 일하면서 축산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것 같아요. 협회직원으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인의식이 생기고 회원농가들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한우인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한우인과 한 마음이 돼 갔다. FTA(자유무역협정)로 신음하는 한우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굶으며 아스팔트위에서 농성을 지속하며 한우인들에 대한 애정은 깊어졌다.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면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직장인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지만 그럴때는 농가들을 위하고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일을 찾는 조 부장은 분명 ‘열정인’임이 틀림없다. 그녀의 열정이 한우산업 발전에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핵심성장 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우수한 축산

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 온 국가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웰빙 열풍에 따른 채식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안티축산’ 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많은 서적과 언론에서 왜곡된 정보들을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축산물과 축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한 축산물 기피현상은 축산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축산인들과 학계종사자들은 책임 의식을 갖고 우리 축산물의 영양·생리적 우수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를 통해, 과학적 고찰 없이 편향되게 보도되는 언론 기사에 반박해 안티축산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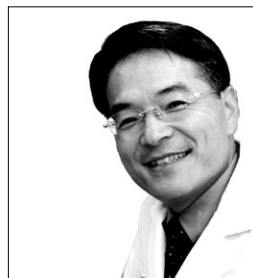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축산업은 생산자 중심의 ‘양적성장’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질적성장’으로 변화하는 식품시장의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 기존의 축산업은 생산효율에만 집중한 나머지 동물복지, 환경오염,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안티축산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친환경 축산업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동물복지를 고려해 건강하게 사육하고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서, 친환경 축산의 개념을 가축 사육단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축·가공 단계, 유통단계, 질병 예방·검출 등 각 단계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최윤재 서울대 명예교수



주선태 경상대 농업생명과학
대학 교수



국내 사육 한·육우 333만마리... 1986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국내에서 사육하는 한·육우 마릿수가 1986년 이래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산란계 마릿수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3일 통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

난 6월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2.7%(8만7천마리) 늘어난 333만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별 자료가 작성된 1986년 이래 모든 분기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 송아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번식우, 가임암소 마릿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한우값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한·육우 사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우를 알려드립니다

비육우경영안정제란?

일본의 다양한 화우산업 안정대책에서 착안하여 협회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제도다. 주요 핵심은 사육농가들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고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쇠고기 공급량을 확충하여 소비자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로 한우농가와 국민, 정부 모두에게 효과가 높은 한우산업 안정화 제도다.

정부에 건의하고 논의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내용 -

1. 사업대상자

- 비육우경영안정제사업 가입 농가
- 계약 체결후 21개월 연속으로 비육중인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비육우 사육농가로서 비육우경영안정제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축산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보전금 지급계약우: 생후 6개월미만 송아지
 -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중복가입 불가
- 보전금 지급대상우: 만 24개월령 이상 비육우

3. 지원대상

- 비육우경영안정제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육우경영안정제 가입 농가에게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지급
- 비육우경영안정제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비육우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50천원씩 납부 (정부 100천원)
 - 계약농가 25%(두당 50천원), 지자체 25%(50천원), 정부 100천원(50%)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납부금 환원: 보전금이 계약농가 부담보다 낮거나 미 지급시

7. 보전금 발동기준

- 분기별 비육우 두당 평균 조수익이 3년 평균생산비 90% 이하로 하락시 차액 (전액) 보전
 - 기준가격 7,020천원/'16~'18년 평균가격의 90%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정산기준

| 구분 | 거세우 | 암소 | 비고 |
|----------------|-------------------------------|-------------------------------------|--|
| 출하규격 (지육중량) | 360kg이상 540kg이하 | 30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300kg이상 440kg 이하 | |
| 가격적용 기준 |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화, 수, 목, 금 평균가 | | |
| 부산물 | 두 · 내장 · 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 |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
| 하자육 처리 | 출하대금의 0.1%를 적립하여 하자육 발생시 사용 | |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
| 기타 | 초과우 및 미만우 지급비율 ⇒ 중앙회 문의 | |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휴대폰) |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